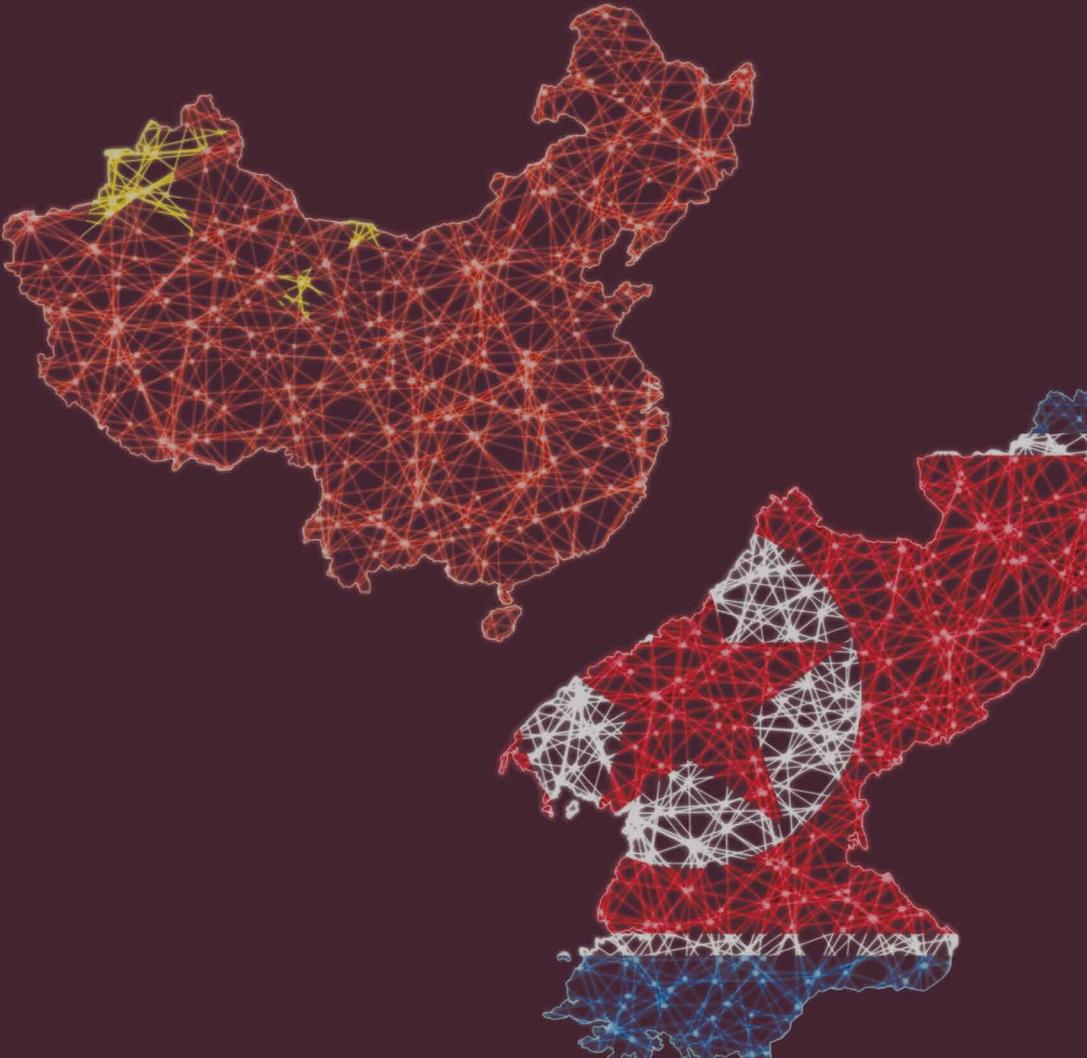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2025 하반기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2025 하반기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목차

요약	06
제1장 중국의 안보 위협: 배경과 평가(총론)	11
• 서언	11
• 중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의 배경과 내용	13
• 소결론	17
제2장 중국 정치사회와 안보 위협 요인	21
• 문제 인식	21
• 2025년 중국 정치사회 추세와 주요 동향	24
• 평가	35
제3장 중국 경제와 안보 위협 요인	41
• 문제 인식	41
• 2025년 중국 경제 추세와 주요 동향	42
• 평가	67
제4장 중국 대외 관계와 안보 위협 요인	69
• 문제 인식	69
• 2025년 중국 대외 관계 추세와 주요 동향	71
• 평가	88
제5장 중국의 군사 동향과 안보 위협	93
• 문제 인식	93
• 2025년 중국 군사 추세와 주요 동향	94
• 평가	109
저자 소개	113

요약

연구 배경 및 개요

- 우리의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상 위협(도전)에 주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군비증강, 대만해협 긴장 조성 등으로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을 미치고 있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직접적 안보상의 위협 이외에도 중국의 정책은 우리에게 다양한 해결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의 국내정치적 불안요인은 미중 전략경쟁을 가중시켜 우리의 연루 위험을 촉발하기도 함.
- 중국이 제기하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안보 도전과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대응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가 시작되었음.
 - 첫 연구는 2025년 5월~10월까지를 분석 대상시점으로 하였음.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경우, 매년 반기 단위로 11월~차기 연도 4월과 차기 연도 5월~10월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임.
 - 연구진은 총론, 정치, 경제, 외교, 군사를 담당할 5명의 연구원 내부 및 외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요약

- 2025년 5월~10월의 중국 안보 위협 특징: 중국의 경우,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이 당장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에게 대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시진핑 권력 이상설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그의 권력 기반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 오히려 그는 9월의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건재를 과시하는 효과를 거둠.
 - 다만, 2024년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제발전의 부진 징후는 분석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 역시 단기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은 희토류 등의 전략자원 통제 능력임. 중국은 이미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희토류와 주요 배터리 원료들을 무기화하고 있고, 그 파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미칠 가능성이 큼.

- 분석 기간 중에도 대만해협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계속되었으나, 이로 인해 미중 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거나 그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지지는 않았음. 오히려 서해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한중 이견이 단기적 갈등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큼.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군사활동이 한반도와 역내 모두에 적지 않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시도한 자국 영유권

강화 조치를 한반도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경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 인근에서의 군사활동 증가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차원에서 미중 간, 그리고 중국-대만 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미 관계상 우리 역시 연루될 가능성이 있음에 대비해야 함.

○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한편, 북중 및 중러 밀착을 통해 반미/반서방 연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안보에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들에 대해 각종 외교 및 경제적 압력을 가중함으로써 이들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이탈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한중 관계에도 적용될 것임.
- 또한, 북중 관계의 회복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자나 남북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에도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지만, ‘전략적 도발’이나 중저강도 도발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음.
- 오히려 북-중-러 연대를 활용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교감하에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를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우리 및 한미 차원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

○ 북중 밀착으로 인해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를 명목상으로라도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 혹은 방임할 위험도 존재함.

- 이는 특히, 2025년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로, 기존 북중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던 전례와는 달리 분석 기간 중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9월)에서 중국은 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음.
즉,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을 돕지는 않더라도 이에
방관적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 전반적으로 2025년 5월~10월간의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은
단기적으로 군사적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 공조하에 공세적 대남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중국의 안보 위협: 배경과 평가(총론)

이동규 | 아산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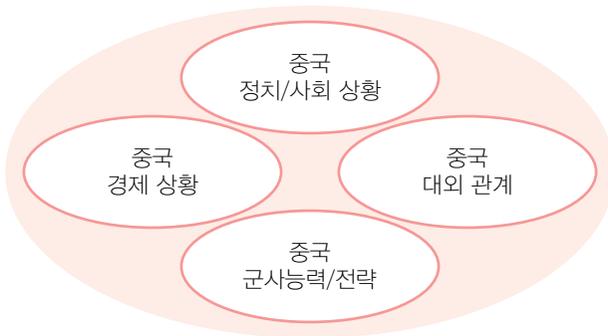
서언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안보적 도전과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중국식 민주’라고 포장했던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 System)’를 폐기하고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 정치 및 사회의 경직성은 높아졌고 한중 간 체제 및 가치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사현대화’를 추진해 온 중국은 남태평양, 대만해협을 넘어 서해에서도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우위를 모색해 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북러 군사 밀착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대러 제재의 효과를 제한해 왔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굴기,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초래했다.

2025년 2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경제성장 둔화와 중국 사회의 불안정으로 ‘성과의 정치(performance politics)’ 압박을 받고 있는 시진핑 정부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관세 맞대응과 희토류 수출 통제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와 사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미 동맹과 협력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해 왔다. 즉, 중국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동맹인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한국에 대한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시진핑 정부가 중국 사회의 안정과 내부 결집,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만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 중국의 안보 위협 개념도



현재 중국이 한국에게 안보 위협을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외교적 압박, 경제적 강압, 군사훈련 등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대외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에 압박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전술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이웃국가, 혹은 경제협력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중국이 한국의

안보에 실제적 도전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2025년 상반기 중국의 안보 위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국 국내정치와 사회 상황, 경제, 대외 관계, 군사 분야에서 한국에게 도전이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의 배경과 내용

1. 중국 내부 정치 및 사회 상황

2025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지난 9월 전승절 80주년 행사 계기 북-중-러 연대 과시,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기반해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중국은 대내적으로 중국공산당 정권 안정과 사회주의 제도 유지를 근간으로 시진핑 1인체제를 강화해 왔다.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시진핑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경기 하방 압력과 이에 따른 대중의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5월에는 마오화(苗華)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의원,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군부 숙청을 계기로 ‘시진핑 실각설’까지 대두되었다. 시진핑이 8월 SCO 정상회의와 9월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주최하고 권력의 건재함을 과시함에 따라 시진핑 실각설은 일단락되었지만, 시진핑 권력에 누수현상이 있다는 의심을 자아내기에는 충분했다.

이를 의식한듯이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고위직 관료뿐 아니라 하급 관리의 비리를 척결하며 대내적으로 생활 밀착형

부패 척결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고 당의 통제력을 사회 기층(基層)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불만은 중국 사회로 확산됐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공장 폐쇄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공장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2025년 상반기에만 1,219건의 노동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나 증가한 수치다.

2. 중국 경제

2025년 상반기 중국 경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결과로 성장률이 다소 호전되었지만, 중국 경제를 억눌러 왔던 구조적 문제, 즉 지방 부채, 부동산 침체와 내수부진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수출입은 성장했고, 이에 힘입어 중국은 사실상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이 보여준 조치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의 대중 관세 공격에 대응해 희토류 제품 수출 통제 조치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공세에 대해서 중국은 대미 관세 맞대응과 대미 희토류 제품 수출 통제로 대응했다. 이 조치 이후 미국의 대중국 관련 품목 수입이 오히려 급증했는데, 이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의 희토류 관련 품목 수입업체에 충격과 위협을 주는 동시에 중국이 이미 희토류 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한중 무역 상황을 보면, 한국은 3년째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발전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에서는 반도체를 필두로 2차전지, 노트북 등 IT·전자 완제품,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늘어났다. 전기승용차 등 대중국 수입품 가운데 과거에 없던 신형 소비재가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2025년 상반기에 북중 무역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북한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각각 24.8%, 17.2%로,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직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년과 2017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1~2년 내에 북중 무역이 당시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대외 관계

2025년 상반기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대외 관계에서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하고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시진핑은 5월 13일 중국-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럼 장관급 회의 주최, 8월 31일 SCO 정상회의의 주최,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 주최, 그리고 9월 9일 BRICS 화상 정상회담 참석 등을 통해 일관되게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우회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일방주의’를 비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협력 대상과 우군을 확대해 가고자 한 것이다.

중국은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를 복원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중러,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중국은 북-중-러 연대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중-러 연대가 가져다줄 실익보다는 그로 인해 초래될 비용과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대신 ‘안정’을 강조했다는데,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북한에 대한 배려로 해석된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4. 중국 군사

2025년 상반기 중국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군사행동을 실시했다. 4월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 주변을 봉쇄했던 중국의 ‘해협외 천둥(雷霆)-2025A’ 군사훈련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국의 해상교통로(SLOC) 및 공급망 리스크를 높였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연합 대비태세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군사훈련은 대만해협을 넘어 한반도 및 주한미군 전략 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 비공식적 전략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동시 위기 관리가 한반도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훈련 증가로 인해 지역 내에서 한-미-일 연합 감시정찰(ISR)·초계 활동과 중국 해상 세력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2025년 5월 중국의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와 군사훈련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선란(深藍) 1호’(2018년), ‘선란 2호’(2024년)와 같은 대형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남중국해에서의 점유 방식을 따라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서해상 구조물 설치와 더불어 대형 부표(浮標) 3기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총 13기의 부표가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된 상태이다. 부표 대부분에는 첨단 복합 센서가 장착돼 해양 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군사 정찰 목적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부표가 한미 해군 전력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5월 22~28일에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福建艦)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수차례 전투기 등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서해 내해(內海)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술한 중국의 군사 활동은 인접국인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활동과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와 주한미군 전략 환경에 복합적 리스크를 초래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구조적으로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상 군사훈련 역시 주한미군 기지, 인천·평택 항만, 수도권까지 타격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소결론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정치사회, 경제, 대외 관계, 군사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금년 상반기 중국의 안보 위협을 평가해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아직 없지만, 국제정세의 변화와 중국의 의도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표 1 중국 위협 정도 분류

긴급	위협이 임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상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하	위협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경우

첫째, 중국 시진핑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미중 간 관세 전쟁은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한 시진핑 체제에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 숙청 과정에서 나타난 시진핑과 군부 실세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로 발전했다.

현재 시진핑의 정치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진핑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추진했던 집단지도체제를 훼손하고 1인 독재를 완성한 상황에서 시진핑의 권력에 대한 불만이 중국 내에 축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것이 미중 경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과 공산당 내 권력 투쟁과 맞물려 시진핑 권력의 누수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미 중국 사회 내에서 시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 불안, 특히 경기 둔화나 부동산 위기, 임금 체불 같은 경제 문제들이 민심 이탈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현상은 학교폭력, 노동 착취, 주택 문제 같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중국 당국이 신속한 미디어 검열을 통해 시위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지만, 일부 영상과 메시지가 내부와 외부로 유입돼 중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여론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사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전체적 통제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치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 국내정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가 중국 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면 한중 국민 간 체제 및 가치 갈등이 확대되고 한중 관계와 한국의 대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가 내부 문제를 외부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위험도 존재한다.

둘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능력이 상당 수준임이 드러났다. 올해 4월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희토류 대상 수출 통제를 실시한 사례는 중국이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중국이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이중물자(군민 양용물자)’ 수출 통제 전략은 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수출관세 부과나 수출쿼터제와 달리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을 근거로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중국이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경제적 타격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서 한국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다. 현재까지 중국의 동 조치가 한국의 대중국 희토류 관련 제품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동 조치의 핵심 내용이 관련 품목의 수출에 대한 중국 국무원의 건별 심사와 허가인 만큼 중국의 의도에 따라 한국의 희토류 수입에도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적 광물 자원에 수출 통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통상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북중 협력관계를 과시하며 이를 한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지난 9월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했다. 이것이 향후 미북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이것을 한중 관계 및 북핵 문제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양자 간 협력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중국을 배제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대화의 촉진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한중 관계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단계에서 더욱 그렇다. 동시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휘방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등 한반도의 중요한 상황 변화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오히려 현재 북한 이슈가 직접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상호 이해 증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이 서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의 서해 관할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에 심해양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바다의 정탐병’이라 불리는 부표도 늘려가고 있다. 만약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감시, 정찰, 항로 방해 등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결국 우리의 서해 관할권이 위협받게 된다. 특히,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은 서해상 잠정조치수역(PMZ) 무력화 우려를 높인다. PMZ는 한중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합의 구역인데, 중국의 일방적 훈련은 이러한 합의 자체를 무력화한다. 이는 향후 서해에서 한국의 해상 및 공중 작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서해상 군사훈련은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군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중국 훈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사입장국 (like-minded country)들과의 다자 공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구조물 설치와 항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방적 조치를 반복하며 한국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선, 즉 동경 124 도선을 기준으로 서해 70%를 내해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이는 북방한계선(NLL) 문제, 한미 연합훈련과도 맞물린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표 2 2025년 상반기 중국의 대한민국 위협 정도

	정치사회 (국내 불안정성 증대)	경제 (희토류, 수출 통제)	대외 관계 (북중관계 복원)	군사 (서해 지배력 확대)
긴급				
상				
중				
하				

제2장

중국 정치사회와 안보 위협 요인

강준영 | 한국외국어대

문제 인식

2025년의 중국 정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귀환과 함께 시작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랄한 독재 정권이 되었고, 국제 경제의 악탈자로 미래를 함께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 공산당 독재의 불투명성을 가진 ‘반(反)민주 독재국가’인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강력히 추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 이는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 최대의 장애가 중국이라는 의미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복귀는 다시 한번 중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백악관 〈국가 안보 전략보고서〉와 미 의회 〈무역 정책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고서로는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ecurity Implications for Global Affairs and the Korean Peninsula〉(2018 및 2021)을, 바이든 행정부는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2)을 참고.

중국을 미국을 일대일로 상대하기 벅차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세계 양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중국 국력이 국제적으로 미국을 극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와 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양국의 국가 목표와 발전 방식의 상이성은 접합점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의 힘이 미국과 대등하게 될 때까지는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양국 관계가 악성 경쟁에 빠져 양자 관계의 후퇴나 조정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우선, 중국적 가치와 관련해 서구 자유주의 가치 및 규범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론²을 설파 중이다.² 또, 브릭스(BRICS) 등을 통한 국제 통상질서 재편이나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통한 반미 연대 강화를 통해 우군(友軍)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전승절 80주년을 통한 북-중-러 연대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시진핑 체제 강화를 통한 확고한 리더십 구축도 대미 응전의 한 축이다. 그러나 뾰족한 단기적 대응 수단이나 제도적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은 제도 개선이나 국제적 공감대 확보 같은 노력보다는 일사불란한 대미 대응을 위해 공산당 정권의 안전과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안전(政治安全)이라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겼다. 시진핑 체제 강화 및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정치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2025년 들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뚜렷한 소생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민생 경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증폭, 시진핑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반부패 운동의 피로감 누적은 결국 시진핑

2. 張維為, 『中國震撼·壹個“文明型國家”的掘起』(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1) 참고, 서구와는 구별되는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 방식, 즉 ‘다른 근대’가 전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돼, 실질적으로는 시진핑 권력 이상설로 보이지만 ‘시진핑 실각설’까지 대두되었다. 공산당의 역사적 지위와 시진핑의 확고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이 최대의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5년 들어 벌어진 아래의 네 가지 주요 정치 및 사회 현상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의 중국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중국 정국의 흐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일차적 분석 대상으로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크게 관심을 끌었던 시진핑 권력 이상설 내지는 위기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증거나 실체 없이 회자됐던 이 논의는 시진핑의 전승절 주재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시진핑 체제 전망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

또 하나는 시진핑의 사회 정화 운동으로 전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파 제거 운동색채를 지닌 반부패 운동과 지방 시찰 등을 통해 시진핑의 정국 장악력을 살펴볼 것이다. 반부패 운동과 지방 시찰이 시진핑 이데올로기를 위한 실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 사회 안정의 근간인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중국 국정 운영 방침으로 적시한 2025 양회(兩會)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독자 발전 노선과 해외 자본·기술과의 협력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각종 시위 현상의 본질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중국 당국은 이데올로기 색채를 띤 시위에는 강경하지만 민생형 시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문제는 민생형 시위가 정치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2025년 중국 정치사회 추세와 주요 동향

1. 시진핑 ‘권력 이상설’의 등장: 시진핑 ‘실각설’의 실체

최근 수년 사이 서방과 대만 등 반중국 세력 내 언론 및 학계를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주로 시진핑의 오랜 집권 권력 집중화에 대한 반발로 당내 원로 세력이나 다른 파벌과의 권력 투쟁이 있다는 시각,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도 권력 이상설과 함께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이들이 일시에 제기됨으로써 해외 언론이나 반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각설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요 고위인사에 대한 연이은 반부패 조사와 이에 따른 낙마가 배경이다. 특히 군 인사에 대한 숙청과정에서 시진핑 파벌로 인식되는 핵심 인사들이 낙마함으로써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張又俠) 등 군부 실세와의 갈등이 핵심이 되었다. 이는 주로 시진핑 계열로 분류되는 중국 군부 고위직의 숙청과 인사이동을 두고 발생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槍杆子裏面出政權)”는 말처럼 중앙군사위는 중국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인데 시진핑 계열이 낙마하자 이를 시진핑 군부 통제의 균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의 『자유시보(自由時報)』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Michael Thomas Flynn)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을 근거로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강력히 제기되었다.³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인 해군 제독 출신으로 시진핑의 군부 실세로 통하는 마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의원의 면직이 6월 27일 결정되면서 퍼져 나갔다. 마오화는 결국 올 4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도 박탈당했다.⁴ 또 군부 서열 3위인 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何衛東) 역시 올 3월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시진핑의 군 장악력에 문제가 생겼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만일 허웨이둥이 낙마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초의 군사위 부주석 낙마자가 된다.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는 시 주석 아래 2명의 부주석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이 2023년 당시의 7인에서 현재 4인으로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낙마 지도자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군에 대한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장유샤 등 경쟁자의 고령 등을 감안할 때, 시진핑을 대체할 마땅한 인물은 부재한 상황임도 현실이다. 이 점에서 시진핑이 당·정·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권위가 약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장유샤가 전승절 80주년 행사 때 주석단에 참여함으로써 시진핑과 장유샤 간의 권력 투쟁설은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간의 당내 투쟁을 거쳐 확립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는 여전히 당(중국공산당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핵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
3. 플린 전 보좌관은 미 육군 중장 출신이자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이 측근인 허웨이둥과 마오화를 각각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위원으로 임명해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그 측근들을 숙청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시 주석은 명목상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군권은 이미 장유샤가 장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4.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마오화 전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마오 위원의 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군 참모장인 리한전(李漢軍) 중장과 핵 과학자인 류스핑(劉士鵬) 중국 핵공업 집단공사 부 총기술자의 전인대 대표직도 박탈했다. 시 주석 계열의 인사가 계속 낙마하고 있는 것이다.

및 SCO 정상회의 등을 통해 확인된 시진핑 주석의 정치 및 외교 행보를 고려할 때 시 주석의 권력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당 중앙의 정책 결정 의사 협조 기구’를 설치한 것이 시 주석의 권력 이상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당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림 1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



출처: AP.

2. 시진핑의 정국 장악력: 반 부정부패 운동의 지속과 지방 시찰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운동이 사회 정화 운동 성격과 정적 제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⁵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유기업 등 소속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순환 감찰’을 통해 고위직 인사들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관료가 처벌당했다. 시진핑 1기 지도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 간부는 2013년 21명,

2022년 34명, 2023년 47명, 2024년 58명 등이며, 장관급은 9명이나 된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외교 및 안보 분야 고위인사의 낙마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2024년에는 로켓군 관련 부패 사례가 급증했다. 이는 시진핑 3기의 국정 운용에 '안보'가 중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부패 문제가 더 이상 위법 행위나 도덕적 해이의 영역이 아닌,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 사안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시 주석은 3기 시작과 함께 자신이 직접 승진시킨 허웨이둥과 마오화, 류젠차오(劉建超) 등 군·정보 핵심 인사에 대해서도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중국 반부패 운동은 과거 고위직 관료(호랑이)를 겨냥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생활 밀착형 부패, 즉 하급 관리들의 비리(파리와 개미) 척결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일반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고, 당의 통제력을 사회 최하층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금융 분야에 대한 반부패 운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금융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이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군부 숙청도 계속되고 있는데 시 주석의 통제력 상실과 통제력 강화를 둘러싸고 관점이 교차하고 있다. 이 밖에 AI 기술을 활용해 부정부패 혐의를 식별하고 있는데 이는 뇌물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경제 쇠퇴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숨겨진 자산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부패 관리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까지 몰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시진핑 권력 이상설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의 지속적 전개는 시진핑의 정국 장악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 주석은 여전히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 1면에 가장 많이 등장해 견재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 시찰을

-
5. 시진핑 체제는 반부패 정책을 상징하는 강령성 문건으로 소위 '8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2012년 집권 초기에 내놓은 공무원 지침으로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언론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 의식 고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꾸준히 하면서 반부패와 당의 영도 등을 강조하고, SCO 등 다자 정상회의 및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우호 지도자와의 정상외교도 매우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만일 실각설이 제기될 만큼 국내 정국이 불안하다면 해외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림 2 시진핑의 지방 시찰(구이저우 및 허난)



출처: 연합뉴스.

물론 군부 이상설이 계속 등장한다거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후계 구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의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상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력 및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면서 견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자신의 정국 장악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특히 8월까지 시 주석은 총 7회에 걸쳐 중국 국내 시찰을 진행해 자신의 권력이 확고 부동함을 역설적으로 웅변하였다. 1월 라오닝(辽宁)성 방문을 필두로 3월 구이저우(贵州)성과 윈난(云南)성, 4월 상하이(上海)시, 5월 허난(河南)성, 7월 산시(山西)성, 8월 시짱(西藏, 티벳)자치구 방문 광폭 행보를 보였다. 방문 지역에서의 활동도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현대화를 강조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금융이나 첨단기술 발전을 강조하였고, 구이저우나 티벳 지역에서는 민족단결 등을 강조하는 등 시진핑식 중국

현대화 전략 방침을 설파했다. 이는 시 주석이 여전히 정국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중국 경제의 역설 현상: 양회 정책에 나타난 모순

올해 3월 초, 중국 정치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개의 회의인 제 14기 3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政協)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즉 양회가 열렸다. 중국은 해마다 최고 국정 자문 기구인 정협과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인대를 통해 한 해 국정운영의 시작을 알린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권력기구의 최고 집행기구인 국무원의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발표하고 전반적인 시정(施政) 방향을 심의 및 확정한다. 이 보고에는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와 함께 예산안, 외교 방침은 물론 대만문제나 각종 사회 문제의 처리 방향 등이 포함된다.

그림 3 제14기 3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



출처: Xinhua.

특히 올해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14차 5개년 경제·사회 계획>의 마지막 해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계속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간 성적표를 제출하는 해이기도 하다. 여기에 수년간에 걸친 경제 부진, 특히 내수와 부동산 침체 및 누적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 급감하는 외자 유입, 개선되지 않는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에 구조적인 농촌 및 농업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 국내 경제 및 사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다. 더욱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공언하면서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벽하게 좌절시키겠다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및 무역은 물론 외교안보적 리스크까지 심화한 상황이라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 주의를 끌었다.

중국은 올해 양회를 통해 ‘시진핑 체제’와 ‘당’ 중심 정치에 방점이 찍혔던 예년 양회와 달리 정치적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민생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국 양회를 앞두고 31개 지방정부에서 개최된 양회도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중국이 봉착한 경제위기를 그대로 반영할 만큼 경제 회복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불안이나 불만의 조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도 2년 연속 열리지 않았고, 2023년 전인대 폐막 연설을 했던 시진핑 주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폐막 연설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다.

올해 중국 경제의 또 하나의 화두는 과학 기술 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 종합 국력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자립적인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科技社會主義)’를 강조한다. 마침 중국산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딥시크(DeepSeek)의 부상은 시진핑 체제가 강조하는 ‘신 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의 표본이 되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중국의 새로운 산업이나 업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칭하는 3신(新) 경제가 전체 중국 GDP의 18%를 상회하는 등

하이테크 산업이 중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AI 체화 지능로봇과 6세대(6G) 이동 통신,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 및 PC, 인재 투자 등 전면적 중국 진흥 전략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지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했다.

또 하나의 화두는 중국 정부가 민영경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 17일 6년 만에 민영기업 심포지엄을 열고 빅테크 기업가에게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그동안 강조했던 ‘공동 부유’와 함께 ‘선부(先富)론’도 다시 강조하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과 공정 경쟁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경제 성장과 기술 자립을 위한 기업 협력 유도 및 과거 빅테크 규제 완화의 신호 발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도 AI 분야에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번 양회에서 언급된 몸체를 갖춘 지능, 즉 구신지능(具身知能, Embedded Intelligence)이나 기업의 전문성, 정밀성, 특수성이나 새로운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가젤(Gazelle) 기업을 강조한 것 역시 민영기업의 선제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중국이 이미 회복 불능의 위기에 들어섰으므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도 향후 시간은 소위 ‘쓰레기 시간(garbage time)’에 불과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정책적 창조성이 발휘되고 있으며 종교적 낙관주의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인해 난국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혼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13년째 세계제조업 1위인 강력한 제조업 능력과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집중 투자는 적어도 중국을 쓰레기 시간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딥시크나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 등은 민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 발전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⁶

그림 4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출처: Getty Images.

그러나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는 중국의 구조적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토지 사용권 매매를 주 재정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정부 부채 감소가 여하히 가능할지 미지수다. 5%의 경제 성장을 독려하면서 GDP 대비 3%의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소비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민 소득 증대를 요구하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동시 발전까지 내세우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다. 철저한 과학기술 자립과 해외 하이테크 기술기업의 대중 투자 유치에 어떻게 절충적으로 이루어질

6.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쓸 것이라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도 강조한다. 국방예산도 작년 대비 7.2% 증액됐지만 특이하게도 외교 예산이 전년 대비 8.4%를 증액했다. 이는 중국이 계속 강조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는 물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에 시달리는 관련국들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외교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일 이들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 당국의 심혈을 기울인 이 정책들은 다시 신뢰를 잃은 언어의 유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중국 사회 안정의 역설 현상: 시위의 증가

중국 경제의 불안은 사회 불안으로 연결된다.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는 시위 형태는 노동자 시위와 부동산 관련 시위, 그리고 제도적 규범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절차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시위 및 반정부 색채를 띤 이데올로기적 시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중국의 경제 둔화와 공장 폐쇄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공장 방화까지 불사하며 시위를 벌였다. 2025년 상반기에만 1,219건의 노동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나 증가한 수치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미완성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주택 구매자들의 항의 시위도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관리 회사의 부당한 가격 인상 등과 같은 불공정 관행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다.

중국 시위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시위는 8월 4일, 쓰촨(四川)성 장유(江油)시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두 시위다. 가해 학생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대해 학교폭력 근절, 가해자 처벌 강화, 그리고 언론 검열 중단 등을 요구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정의 실현”, “학교폭력 근절”, “민주를 돌려 달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공산당 물러가라”를 외치기도 하였다. 시위는 중국 공안에 의해 진압되었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라는 단일 사안을 넘어, 지방 권위에 대한 불신,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반감 등이 겹친 일종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출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반정부 및 반체제 시위도 등장했다. 4월 15일 쓰촨 청두(成都)의 한 육교에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소셜미디어 X의 반중국 계정인 ‘리선생은 네 선생이 아니다(李老師不是妳老師)’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의 한 육교에 세 개의 현수막이 걸렸고, 현수막에는 “중국은 누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가 바로 방향이다”, “국민은 권력을 견제 받지 않고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정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치체제 개혁 없이는 민족 부흥도 없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 현수막을 만들었다고 밝힌 한 중국인은 ‘리선생은...’ 계정에 “1년간 준비했다. 널리 확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⁷

또 8월 7일 오전에는 쿤밍(昆明) 항전승리기념당 입구에서 한 남자가 ‘시진핑 퇴진’ 플래카드를 들었다. 소셜미디어 X의 ‘리선생은 네 선생이 아니다’ 계정은 7일 쿤밍 항전승리기념당 앞에서 한 남성이 ‘시진핑 퇴진’이라고 적힌 흰색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엄격한 통제사회인 중국에서 최근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애국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역시 애국과 내부 단합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위는 더욱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또 중국이 9월 3일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철통 경계에 들어간 8월 29일 밤 10시쯤 충칭(重慶)의 한 대학가에서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역이용해 당국을 조롱하는 신종 ‘원격 시위’가 출현했다. 중국을 탈출한 한 반체제 인사가 대도시 한복판에 반정부 구호를 투사하고, 이를 막기 위해

7. ‘리 선생님은 네 선생님이 아니다(李老師不是妳老師)’라는 활동명을 쓰는 10만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 트위터 리안이 운영하는 계정이다. 이미 2022년부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주로 반대 시위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하는데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의 게시글을 올린다.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 미 CNN 방송 등 서방 외신도 그가 올린 현장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 “한명이 세계 완파...중실체 까발리는 ‘리선생’에 공간 혈안됐다.” 중앙일보, 2022년 12월 2일자.

우왕좌왕하는 공안 모습을 몰래 촬영해 전 세계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원격 시위는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이 있다”, “노예가 되길 거부하는 인민들이여, 일어나라”, “붉은 파시즘을 타도하고 공산 폭정을 뒤엎자” 같은 내용으로 고층 건물 벽면에 거대 문구들을 투영시켰다.⁸

중국 공안이 발원지를 찾아내기까지 약 50분간 이어진 이 영상은 중국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한 게시물은 나흘 만에 조회수 1,800만 회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즉각 보복에 나서 치홍(戚洪) 형제 중 한 명과 친구를 체포하고, 시골에 사는 노모를 심문했다. 중국의 유명 블로거 리잉(Li Ying)은 『뉴욕타임스(NYT)』에 “그의 행동은 공산당 통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열병식을 앞두고 안정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은 당국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평가

전체적으로 2025년 중국의 상반기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시진핑 권력 이상설로 점철되었으며 경제 부진에 다른 불만들이 민생형 시위로 많이 분출되었다. 우리나라와 대만 등지에서 유독 관심을 끌었던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증폭되기도 하였다. 특히 8월 초 개최된 정치 회의인 베이파이허(北戴河) 회의에서

8. 투영을 주도한 인물은 충칭 출신의 43세 치홍(戚洪)으로 알려졌다. 그는 타이완 중앙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강대해 졌다는 건데, 이는 원한의 초점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하고 싶지만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무엇을 부흥하겠다는 건지, 문화대혁명 때 인간을 동물의 위치로 떨어트렸는데, 과거의 좋았던 것과 나뉘는 것을 모두 파괴하였는데, 시진핑과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돈 밖에 없습니다”라고 중국 시진핑 체제를 비판했다. “중국 청년의 프로젝트 시위, 충칭 용사 치홍,” *Rti*, 2025년 9월 6일자.

시진핑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억측은 적중하지 못했고, 결국 10월에 열리는 20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민생형 시위의 폭발적 증가나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반체제 및 반정부 성격의 1인 시위나 현수막 시위, 투영 시위 등은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시진핑 권력 이상설에서 위기설, 급기야 실각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실각’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일부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도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권력 이상설이나 위기설의 근원은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시 주석 최측근 고위직까지 향했고 시 주석이 측근을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사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시 주석 계열 인사를 숙청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이는 시 주석이 과거 총 장비부와 로켓군을 숙청했을 때 다수가 장유사의 부하이거나 파벌이었다며 향후 시자권(習家軍/시진핑 측근)에서도 부패 증거가 확인되면 시 주석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계파도 가차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⁹

이로 인해 시 주석의 군권이 오히려 공고하다는 견해와 자신의 계파를 숙청한 이상 권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 그러나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이완되었을 수는 있어도 실각은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국을 이끌고 있는 공산당이 세계적 국가인 중국의

9. 특히 시진핑의 이 같은 행보를 양모(陽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모란 반대파를 색출하기 위해 발언이나 행동의 자유를 주고 이를 이용해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일찍이 마오쩌둥이 벌인 대명대방(大鳴大放)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마오는 대명대방 운동이 끝난 후 자신과 중국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인사들을 우파(右派)로 모는 반우파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 바가 있다. 대만의 군사안보연구기관인 국방안전연구소의 선명스(沈明室) 소장이 한 강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반토막 난 중국 중앙군사위…4중전회, 새 부주석 선출하나.” 중앙일보, 2025년 6월 2일자.

정권 교체를 권력 투쟁의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 교체를 통해 확고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통치 지위는 영원히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중국공산당은 혼란한 정권 교체를 피해야 한다. 특히 작금의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중국의 혼란은 미국 극복의 결정적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현행 중국공산당 당장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며, 당의 지도자는 총서기이므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 통수권자로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게 돼 있다. 따라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의 분리는 제도적으로 당헌 위배에 해당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총서기가 통제해야 하므로 군부 2인자가 총서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국가주석은 행정부의 명목상 수반으로 군 통수권이 없는 명예직이다. 물론 13기 4중전회를 통해 갑자기 중앙 총서기가 된 장쩌민(江澤民)의 권력 지위를 공고화해주기 위해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이 군사위 주석을 맡은 경우가 있지만 이는 원로 그룹인 중앙고문(顧問)위원회의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다. 향간에서 말하는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의 분리는 공산당 지배체제의 균열과 다름이 없으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물론 모든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만일 시 주석의 권좌가 흔들린다면 조정과 타협이 진행될 것이고, 그 윤곽은 10월 4중전회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부나 군부의 인사이동을 권력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5년 4월,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실의 중샤오쥔(鍾紹軍)이 교체되었고, 2024년 8월에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와 북부전구 사령관이 교체되었다. 또 올 4월 중국 지도부가 중앙조직부와 중앙통일전선공작부(통일전선부)의 수장을 맞바꾸는 이례적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리간제(李干傑) 중앙조직부장과 스타이펑(石泰峰)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의 직무를 맞바꿨다. 이는 시진핑에 집중된 권력 조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실 ‘시진핑 실각설’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함께 서방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중국 관련 회색지대 전술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행정부 및 의회 내 고위인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만침공설’과 ‘시진핑 실각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는 전 세계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역내 현상 변경 세력이자 글로벌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여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의 신빙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면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심화한 상황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일종의 외풍(外風)이다. 이 강력한 외풍이 중국 경제를 흔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통치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장유샤 등 군부 실세와 반시진핑 세력이 시진핑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은 내풍(內風)으로 판단된다. 내풍이 시진핑을 완전히 실각시킬 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군부에 대한 지나친 불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시진핑 주석이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천안문 성루에 장유샤를 이례적으로 1열에 배치한 것은 군부 실세와의 타협이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시진핑 실각설과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대중 및 대미 외교 추진에 오판과 오산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결국 미중 관계에 있다고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문제를 완만히 합의해 중국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해 주고 시 주석의 체면을 세워줄 경우, 시진핑 실각설이나 급변하는 권력 이상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현 체제 유지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만약 위기라면 현실적 타협이 불가피하다. 반시진핑파의 압박으로 조정과 타협을 통한 권력 조정이 유력하고, 이 경우 군부 및 반대파와 타협을 통해 후계

구도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위 궁정(宮庭) 정변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하나는 경제 및 사회 불안에 따른 시위 증폭을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 불안, 특히 경기 둔화나 부동산 위기, 임금 체불 같은 경제 문제들이 민심 이탈을 촉발하고 있다. 이 현상은 학교폭력, 노동 착취, 주택 문제 같은 구체적 사건이 시위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신속한 미디어 검열을 통해 시위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지만, 일부 영상과 메시지는 내부와 외부로 유입돼 여론과 관심을 촉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용기와 영향력이 1인 시위나 현수막 시위, 투영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통제 기제도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반기에 중국은 중요 정치활동을 앞두고 있다. 10월경, 20기 4중전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이며 여기서 중앙위원이나 정치국원의 보선, 나아가 상무위원의 보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만일 상무위원이 보선된다면 후계 구도와 연결되는 접점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중국의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시진핑의 리더십에 도전이 되는 양상이다. 이는 상당한 내부 불안정성과 권력 투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경제 심리 회복,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와 호흡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점에서 10월 31일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 조우하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은 미중 관계는 물론 글로벌 정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중국 경제와 안보 위협 요인

정환우 | 한중무역연구소

문제 인식

2025년 상반기 중국 경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 실시로 성장률은 다소 호전되었지만 중국 경제를 억눌러 왔던 구조적 문제, 즉 일부 지방 부채, 부동산 침체와 내수부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새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 관세 공격이 중국 경제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 등 중국의 반격 능력도 상당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90일간의 관세 휴전이 마감되는 10월 말 이후 모습을 드러낼 미중 간 협상 결과가 중국의 경제와 통상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년차 무역적자가 상징하듯 한중 경제관계 역시 쌍방향 국제분업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중 간 교역 증가와 가발류를 중심으로 한 북중 간 새로운 분업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2025년 상반기 중국 경제를 중국 경제 및 산업 동향, 무역·공급망·통상 등 대외경제 동향, 북중 무역을 포함한 한중 경제관계 동향으로 나눠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의미와 중국발 리스크 관련 시사점을 평가한다.

2025년 중국 경제 추세와 주요 동향

1. 경제 및 산업: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혁신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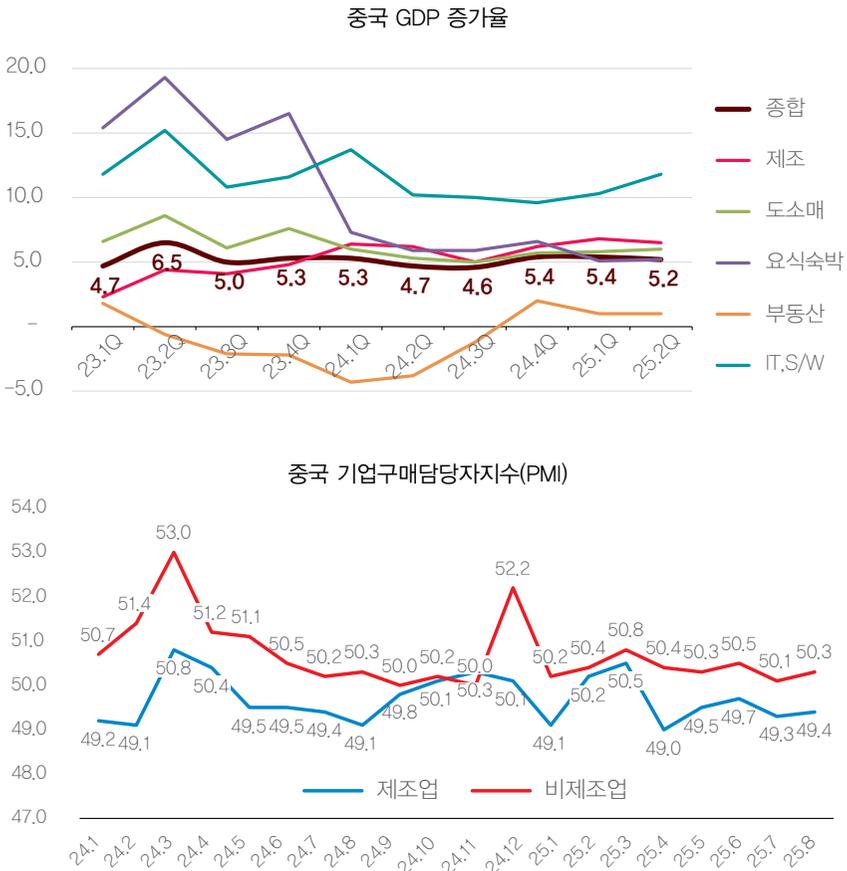
1-1. 경기: 경기부양 속 상반기 성장률 양호, 관세전쟁 영향은 불안요인

지난해 중반 성장률 하락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으나 '24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4년 4/4분기 5.4%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5.4%와 5.2%의 GDP 증가율을 기록, 올해 2개 분기 동안 연속해서 연간 목표인 '5% 전후'를 상회하고 있다. 주요 산업을 보면 IT 및 소프트웨어가 성장률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도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소비지원 등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소비분야(도소매)도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업의 경우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의 억제책으로 침체를 겪어 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일부 완화 조치로 다소 호전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양대 지표인 실업률과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의 경우 올해 1월 계절적 요인(춘절)의 영향으로 5.4%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5월과 6월 연속 5.0%의 안정세를 회복하는 등 COVID-19의 영향이 한창이던 2022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¹⁰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2025년 1월 100.5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후 수개월째 99.3~100.1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3개월 이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생산자물가지수도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4~6월에는 98.1~96.8P로 하락하고 있어 물가 상승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다.

10. 2025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목표치는 '5.5% 전후'이다. <2025년 정부공작보고>

그림 1 중국 GDP 증가율 및 기업구매담당자지수(PMI)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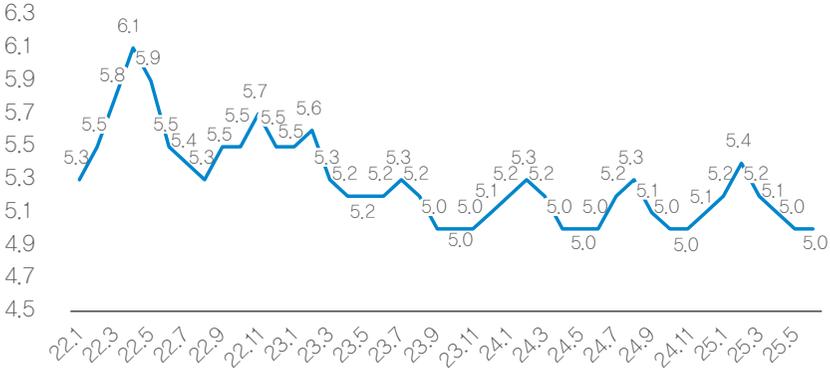
그러나 아직 성장률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중 관세 전쟁의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다. 2~3개월 경기선행 지표로 이용되는 제조업 기업구매담당자지수(PMI)는 지난해 말~올해 초 경기확장세를 가리키는 50.0p를 넘기도 했으나 4월 미중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49.0p로 하락한 뒤 5개월 연속 경기위축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¹ 비제조업 PMI의 경우 장기간 경기확장세(50.0p 이상)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 간 관세 갈등이 폭발했던 4월 49.0p으로 급락했으며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으나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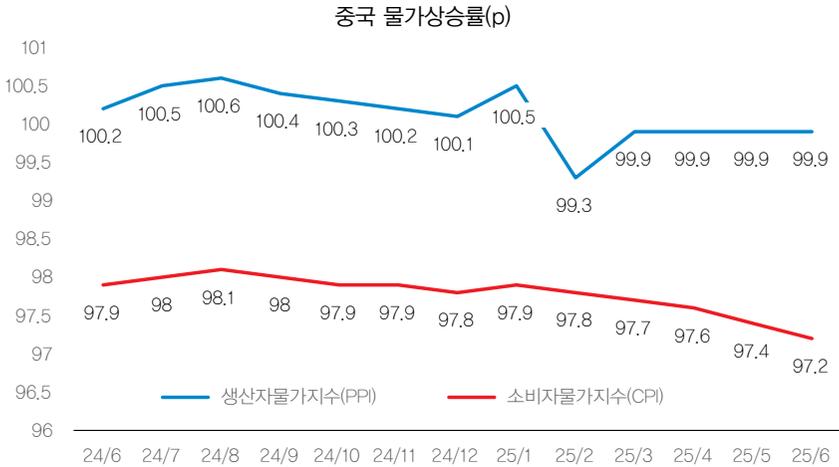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2/4분기까지 GDP 증가율은 연간 목표인 5%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미중 관세 전쟁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말 미중 양국이 관세 전쟁 휴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상태로, 미중 관세전쟁이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90일 휴전이 종료되는 10월 말 이전까지 양국의 협상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중국 조사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중국 조사실업률(%)



11. 기업구매담당자지수(Purchaser Manager Index, PMI)가 50p 이상이면 경기 확장세를, 이하일 경우 경기 위축세를 가리킨다.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1-2. 산업: ‘중국제조 2025’ 10년 성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전략 본격 추진

중국의 연이은 AI 연구개발 성과 등 중국의 혁신 능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2025년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발표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 실적을 완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초보적이거나 10년을 맞은 성적표를 당시 발표했던 10대 전략산업의 현 수준을 가늠해 봄으로써 ‘중국제조 2025’의 실적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10년 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된 10대 산업(‘중국제조 2025’에서 지정한 10대 전략산업)¹²은 과장 평가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딥시크(DeepSeek) 등 인공지능(AI) 개발 성과와 일부 반도체 기술 자체 개발, 세계 60% 가량을 차지하는 5G 보급 규모, 상용 여객기 개발, 고속철도 개발 및 보급, 특히 희토류 산업생태계 장악은 국내외 해외언론 보도, 무역 통계 수치로도 확인 및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12. ▲차세대정보기술, ▲고급 C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학장비 및 첨단선박, ▲선진 궤도 교통장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특수금속 기능 재료, ▲생명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기 등이다.

중국의 어떤 산업이 우리를 추격할 것인가, 즉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발 산업혁신이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산업에 어떤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나름 성공을 거둔 중국은 이제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바로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이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의미의 신질생산력이 올해 처음 제시된 개념은 아니다. 2023년 9월 헤이룽장(黑龍江)성 시찰 당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관련 회의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목표로 언급되고 있다.

처음 제시된 뒤 개념 수준에 머물렀던 ‘신질생산력’ 산업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올해 3월 발표된 <2025년 정부공작보고>이다.¹³ 여기에서 제시된 ‘신질생산력’에 기반한 정책 과제는 디지털 혁신이 주도하는 신흥 및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 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디지털 혁신과 연계해 산업육성과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이다.

표 1 ‘신질생산력’ 정책 내용과 과제

- **(기본 방향)** 지역 여건에 따라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개발하고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간 융합 발전, 신행산업 육성+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 **(신흥·미래 산업 육성)** 신흥산업과 관련 상업·우주 항공, 저고도 경제, 심해 탐사 등 추진. 미래산업과 관련 바이오, 양자 기술, 맞춤형 지능, 6G 등 육성
- **(전통산업 개조·업그레이드)** 제조업 고품질 발전 가속화하고, 산업기초 재구축과 주요 기술·장비 공략 강화. 주요 제조업 기술 개조·업그레이드와 장비 갱신 프로젝트 실시.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조업 ‘품목 개발,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 사업 추진
- **(디지털 임베디드(embedded))** 디지털 혁신의 견인 역할 확대. ‘AI+’ 액션 지속 추진. 디지털 혁신을 제조업과 잘 결합,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스마트 제조 장비 발전. 5G 응용 확대, 산업 인터넷 혁신 가속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국경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범화. 플랫폼 경제 규범화와 건강 발전 촉진, 소비 확대

출처: <2025 정부공작보고>(2025.3.12).

표 2 '중국제조 2025' 10대 전략적 신흥산업 주요 성과

산업	주요 실적
차세대 정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5G기지국 337만 개(세계 점유율 60%), 6G 특허 출원량 40.3%(세계 1위) - AI 특허 출원량 세계 1위(WIPO, 2023). - DeepSeek, 바이두 Ernie4.0, 알리바바 Tongyi Qianwen 등 AI 모델 상용화
CNC 공작기계 및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오미 로봇 협동로봇(Cobot) 수출 세계 2위(2023) - 서비스 로봇 시장 점유율 31%(전 세계 1위)
항공우주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항공기: C919 여객기 상용 (2023.5 동방항공 첫 운항), 누적 주문 1,200대 - 우주기술: 창어6호 달 뒷면 샘플 귀환 성공(2024) -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글로벌서비스 확대(139개국 운용)
해양공학장비 및 첨단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해 장비) 자오룽(蛟龍號) 2호 잠수정 심해 7,000m 탐사. 텐궁(天宮) 심해 드릴링 플랫폼 해저 2,000m 시추 능력 보유 - (고기술 선박) LNG선박 점유율 35%(23년 2위), 극지LNG선 아이스급 기술 확보
선진 궤도 교통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 푸싱호(復興號) 최고속 350km/h 상용화 등(2023) - (해외진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개통
에너지절감·신에너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23년 판매량 949만 대(세계 점유율 60%) - 전기차 수출점유율 '17년 1.3% → '24년 23.3%(2위), 전기버스 37.3%→50.0%(1위)
전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V송전) 1,100kV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상용화 -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생산량 세계 80%, 해상 풍력 터빈 16MW 개발
농기계장비	정밀농업 드론시장 점유율 70%(DJI Agras 시리즈)
신소재	그래핀 개발(2024.1), 나트륨 배터리, 고성능 탄소섬유 등 개발
특수금속재료	중, 글로벌 희토류 산업생태계 사실상 장악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보고 원료의약품의 30% 중국산 - 중국 내 개발 중 신약 6,000건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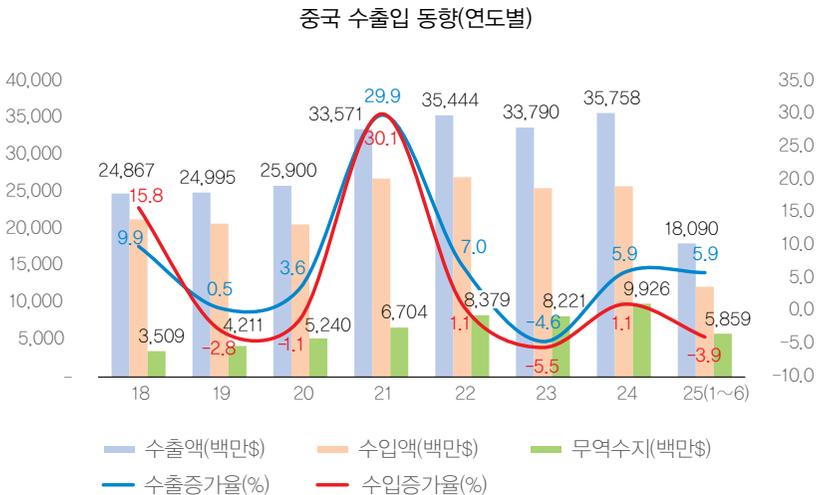
출처: 중국 공신부 통계발표, <2025년 정부공작보고>, 무역통계(trade map) 및 관련 언론보도 참고하여 작성.

중국의 최신 산업정책 버전인 ‘신질생산력’이 아직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 동향과 중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할 때 상당히 큰 의의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을 지나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디지털 혁명 성과를 실물 경제(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신속하게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국가가 향후 글로벌 성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바로 그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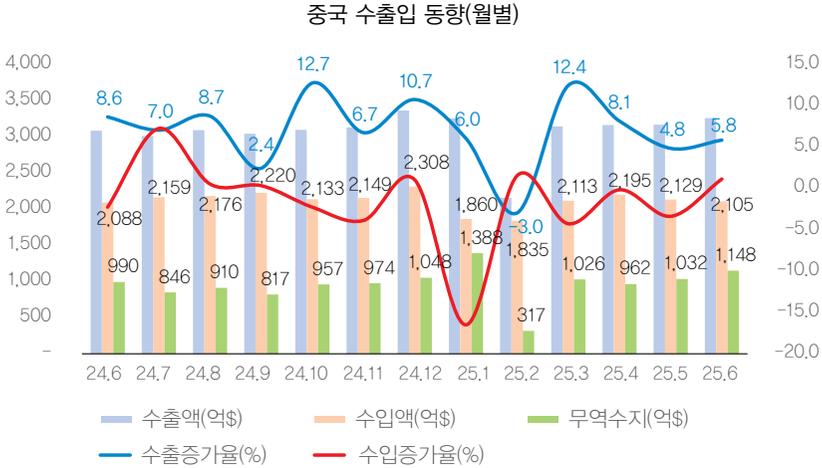
2. 대외경제: 미중 관세 협상 속 글로벌 공급망 장악 능력 입증

2-1. 무역: 수출증가세 지속, 글로벌 수출은 물론 수입 위상 강화

그림 3 중국 수출입 동향(연도별 및 월별)



13. 李强, 政府工作报告, 2025년 3월 5일자.



출처: 중국 해관총서(Trade Map).

중국은 '24년 5.9%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9%의 양호한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2년과 '23년 COVID-19의 충격에 따른 수출 급감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별로도 올해 1월과 2월 계절적 요인(춘절)으로 인한 감소세에서 벗어나 3~6월에는 4.8~12.4%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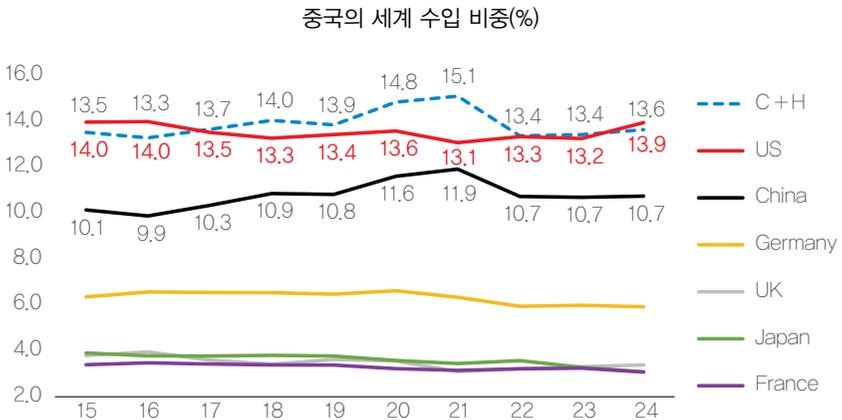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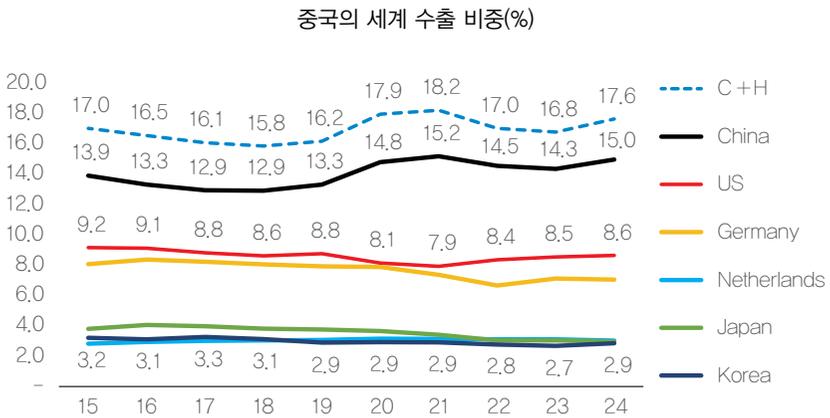
이러한 수출입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은 사실상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21년 15.2%(홍콩 포함 시 18.2%)까지 높아졌던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COVID-19를 맞아 '23년 14.3%까지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난해('24년) 15.0%(홍콩 포함 시 17.6%)로 확대되었다. 2위인 미국(8.6%)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이다.

중국이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2위이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 1위 수입국인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OVID-19 당시('21년) 중국의 세계 수입 비중은 11.9%(홍콩 포함 시 15.1%)였다가 COVID-19를 맞아 다소 줄어들기도 했지만 '24년에도 10.7%(홍콩 포함 시 13.6%)로 미국(13.9%)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위안화 환율 상승(평가 절하)이 지속돼 왔음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출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글로벌 수입 비중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입 확대는 글로벌 수요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이 최근 글로벌 최대 수입국 지위를 이용해 전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공격에 나선데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4 중국의 세계 수출 및 수입 비중



설명: 'C+H'는 중국과 홍콩을 합친 수치임.

출처: Trade map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기준 15.0%으로 2위(미국)와 3위(독일)를 합한 비중보다도 큰 규모다. 그러나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1차 산품이나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공산품만 볼 경우 중국의 수출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세계 중간재(화학·철강 등의 반제품과 부품·부분품) 수출품 총 2,626개 품목(HS 6단위 기준)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로 총수출 대비 중국의 비중과 차이가 없지만 이 중간재 중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품목 수는 1,157개로 40.9%에 이른다. 세계에서 수출되는 중간재 수출품 수의 41%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1위 수출국)인 중국이라는 뜻이다. 독립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제품(기계, 설비, 승용차 이외의 화객차 등)을 의미하는 자본재의 경우 중국의 수출 비중은 더욱 커지는데, 액수 기준으로는 22.6%를 차지하며 중국이 1위인 수출 품목 수는 총 655개 가운데 338개로 51.6%로 늘어난다.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자본재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에 대해 중국의 수출이 1위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소비재 수출에서 중국은 액수 기준으로 18.6%를 차지하며, 중국이 1위 즉, 최대 수출국인 품목의 수는 총 4,850개 중에서 2,039개로 42%나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세계 소비재 수출의 42%를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표 3 세계 수출에서 중국의 위상

	수출액(2024년)		수출1위 품목(2024년)	
	수출액(억\$)	비중(%)	품목 수	비중(%)
중간재	15,612	15.2	1,157/2,826	40.9
자본재	7,892	22.6	338/655	51.6
소비재	10,653	18.6	544/1,369	39.7
합 계	34,157	17.5	2,039/4,850	42.0

설명: 품목 기준은 HS 6단위.

출처: Trade map 통계를 계산하여 작성.

2-2. 공급망: 희토류,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 능력 입증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이 보여준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미국의 대중 관세 공격에 대응해 4월 4일 실시한 희토류 제품 수출 통제 조치였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집권 2기에 들어선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 공격에 나서자 중국이 내세운 대응책은 대미 관세 맞대응과 대미 희토류 제품 수출 통제였다.

돌이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경제압박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왔다. 이미 2020년 12월, 중국은 뒤늦게나마 분산되어 있던 수출 통제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수출통제법』을 발효시켰고, 이어 2024년 12월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Regulations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¹⁴을 발효시킨 뒤, 같은 달 12월 31일에는 2025년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을 발표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른다.¹⁵ 미국에서 바이든-트럼프 간 선거전이 한창이던, 정확히는 트럼프의 우세가 굳혀지던 때에 이루어진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 품목 통제 법령 정비는 곧 닥칠 트럼프 2기의 대중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었음이 밝혀진다.

2025년 2월 미국이 다른 주요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강력하게 맞관세로 대응하는 동시에 4월 4일 희토류 관련 품목을 중국이 2024년 12월 시행하기 시작한 바 있는

-
14. 2020년 발효시킨 『수출통제법』의 시행령이며 수출 허가 절차, 통제 목록,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관리 등 수출통제법의 세부 집행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수출 통제 방식은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 의무화 방식이다. 즉, 수출 허가 신청서, 계약서, 사업 허가증 및 기술 사양서, 최종 사용자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수출 가능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15. 중국 정부의 주관 부처인 상무부는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수출 품목에 대해 건별로 심사하고 가능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이 리스트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나, 올해 4월 4일 미국을 겨냥한 희토류 제품 수출 통제 리스트 발표와 같이 안보상 필요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갱신되기도 한다.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다.

이 조치는 미국의 희토류 관련 품목 수입업체에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중국이 이미 희토류 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이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희토류 제품 수입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조치가 미국의 대중 관련 품목 수입 급감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입 폭증으로 나타난다. 스칸듐, 이트륨이 포함된 희토류 가공제품(HS280530)의 대미 수출은 '25년 상반기 전년 대비 513.5%나 증가한다.¹⁶ 이러한 미국의 대중 희토류 제품 수입 폭증은 동 조치로 미국의 관련 수입업체에 충격과 위협 즉 혼란을 주었음을 반증한다.

올해 4월 중국이 희토류 대상 수출 통제를 실시한 사례는 중국의 희토류 산업 경쟁력 및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중국이 희토류 산업의 전과정(체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통제 대상 품목을 보면 중국이 이제 단순한 희토류라는 광물자원의 생산국이 아니라 희토류를 가공한 완제품(예를 들면 희토류를 활용해 제조한 자석 등)을 아우르는 희토류 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번에 포함된 제품들은 희토류 원재료(1차 재료)가 아닌 중간 및 최종재(해당 희토류 성분이 포함된 합금, 표적재, 혼합물)였다.¹⁷

16. 미국산 희토류 원재료(1차산품)의 수입(미국의 대중 수출) 급증도 주목된다. '25년 상반기 미국산 희토류 원재료(HS284690)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7.9%나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입 급등은 중국 정부의 4월 4일 조치로 미중 간 희토류 제품 수출입에 엄청난 혼란과 기업들의 비상 대응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료: GTA 통계)

17. 실제 리스트에 적시된 7개 희토류 원재료(1차산품)가 아닌 7개 희토류가 포함된(가공된) 중간 및 최종재(해당 성분이 함유된 합금, 표적재, 혼합물) 등으로 HS10단위로 50여 개 품목이었다. 7개 희토류 및 주요 용도는 ▲사마륨: 항공우주군사 응용, 암 치료, ▲가돌리늄: MRI 조영제, 원자로 제어봉, ▲테르븀: 고온 연료전지 안정화제, 레이저 가공; ▲디스프로슘: 전기/하이브리드차모터, 풍력터빈, 데이터 저장장치, ▲루테튬: 석유화학 촉매, 방사선 치료, ▲스칸듐: 항공우주 고강도 합금, 전극 재료, 레이저, ▲이트륨: 고온 초전도체 및 산화물 세라믹스, 레이저, 항공기 부품 등이다.

둘째,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인 ‘이중물자(군민 양용물자)’ 수출 통제 전략은 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수출관세 부과나 수출쿼터제¹⁸와 달리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으로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미국 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 셋째로 주요국 특히 미국에 대해 실질적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드러난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제품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무역 통제력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마그넷(희토류를 이용해 만든 영구자석)을 독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²⁰

2-3. 미중 관세 협상: 휴전 속 물밑 힘겨루기

최근 중국의 통상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역시 미중 통상분쟁이었다.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최대 표적은 당연히 중국이었다. 트럼프는 '24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중국 60% 관세 부과를 천명했던 트럼프는 '25년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미중 양국 간에 격렬한 말 폭탄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공격은 4월 2일 미국의 대중국 34% 추가 관세 부과와 4월 4일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제품

18. 2010년 중국이 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과 관련하여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실시했을 때 중국은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와 수출쿼터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정작 대일본 수출 통제를 할 때는 아무런 규정 사용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결국 일본은 중국에 굴복했지만, 2011~13년 EU와 공동으로 중국의 수출관세와 수출쿼터제를 WTO 규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고 중국은 패소했다.

19. 다만 EU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 정례기자회견, 2025년 6월 27일자.

20. 이재명-트럼프 공동기자회견, 2025년 8월 26일자.

수출 통제 조치까지 이어졌다.

이어 5월 10~11일 열린 베센트(Scott Bessent) 미 상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 부총리 사이에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90일간의 관세 전쟁 휴전(관세 부과 연기)에 합의하고 7월 28~29일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또 다시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미중 양국은 관세 휴전이 끝나는 10월 말 이전까지 관세를 포함한 미중 간 무역 현안 관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국의 대중국 경제 압박이 예견되었고 실제로 올해 2~4월 미중 양국은 강력한 말 폭탄을 주고받았지만 8월 현재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초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의 대중 관세 공격이 연초와 달리 누그러진, 정확히는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양국 간 무역구조이다. 미국의 대중 수입에서의 소비재의 비중은 44.5%이다. 이어 자본재 21.9%, 부품 17.7%, 반제품 12.9% 순이다.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3.8%(2위, 1위는 멕시코 15.2%)에 달하며, 특히 미국의 전체 소비재 수입 가운데 중국산 소비재의 비중은 19.8%이며, 그중 준내구소비재²¹⁾의 비중은 48.5%에 이른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라 각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입 품목은 규모도 적을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 대한 위협이 그리 크지 않은 품목들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에서는 반제품이 38.9%를 차지하며 부품 18.3%, 소비재 17.1% 등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국 수입의존도는 6.4%에 불과하며 이중 소비재 11.5%, 반제품 8.9%, 자본재 7.9% 등이다. 주요 품목만 살펴보더라도 미국 대중국 수출의 규모와

21. 준내구소비재(Semi-durable consumer goods)란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1년 전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가리킨다. 의류 및 신발, 가정용 직물제품(침대 시트, 커튼, 타월 등), 식기 및 주방용품,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포츠 용품 등이다.

품목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농산품, 천연가스, 자동차, 항공기 등이다. 대두 7.3%, 액화가스 6.8%, 집적회로 5.4%, 가솔린승용차 4.0%, 원유 3.7%, 항공기 3.2%, 항공기부품 2.5%, 재활용 구리 2.2%, 반도체제조장비 1.9%, 탄화수소 1.6%, 항공기부품(터보젯) 1.6%, LNG 1.5% 등이다. 대부분 미국의 ‘팔 비틀기’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구매해 왔거나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이거나 미국의 생산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이다. 양국 무역구조상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전략산업 특히 희토류 산업에서 드러난 중국의 강력한 보복 능력, 즉 전략자원에 대한 공급망 장악력이다. 중국은 최대의 희토류 자원 보유국일 뿐 아니라 채취에서 정련, 관련 완제품(자석류 합금 등) 제조까지 희토류 산업체인의 전 과정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은 희토류 광물 원자재(1차산품)의 최대 수입국이자 희토류 가공 완제품의 최대 수출국이다. 실제로 희토류 광물원료(1차산품)인 ‘희토류 금속 광석 및 정광’(HS253090)의 글로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에 달하며, 대표적인 희토류 완제품인 ‘희토류 금속, 스칸듐, 아트륨’(HS280530) 품목의 경우 2023년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63.9%에 달했다.²² 심지어 미국조차도 중국에 대량의 희토류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실시한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²³ 대상 품목은 희토류 광물이 아니라 희토류 산업의 최종제품이라 할 수 있는 희토류를 이용해 만든 합금, 표적재, 혼합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최근 중국이 희토류 산업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고 토로했다.²⁴

22. Trade map 자료를 계산.

23.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일부 중중 희토류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 결정〉(公布對部分中重稀土相關物項實施出口管制的決定), 2025월 4월 4일자.

표 4 미중 간 2025년 관세 전쟁 일지

일시	내용
미 '24년 대선 이전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1기 대중 관세 기본 유지. 일부 중국 제품 추가 관세 트럼프 후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예고
2025.2.4	美,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펜타닐 유입 억제 위해 조치 설명 中, 즉각 보복 발표. 석탄, LNG, 농기계 관세 부과 및 특정美기업 사업 제한 예고
2025.3.4	美, 펜타닐 불법거래 관련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 부과 예고 中, 미국 농산품(계육, 돈육, 콩, 우육)에 최대 15% 관세 추가, 미국 기업 사업 제한 확대
2025.4.2	美, '관세 해방의 날' 선포 및 대규모 관세 인상. 중국산에는 34% 추가 관세 부과
2025.4.4	中, 미국의 34% 관세에 대응 미국 제품에 동일한 34% 관세 부과.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 강화, WTO 제소. 일부 미국 기업 사업 제한 및 미국 투자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제한 발표
2025. 5.10~11	미중 제1차 고위급 무역 협상(제네바). 베센트 재무장관-허리핑 부총리 관세 전쟁 휴전(90일간, 25.8.12 만료 예정) 관세 115%씩 대폭 인하
2025.6.9	미중 제2차 고위급 무역 협상(런던). 베센트 재무장관-허리핑 부총리 관세 외에 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펜타닐 관련 협력, 중국 경제모델 변화 요구 등 논의
2025. 7.28~29	미중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스톡홀름). 베센트 재무장관-허리핑 부총리 미중 관세 휴전 3개월 연장 합의

출처: 각종 언론 보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24. 2025년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 세계 마그넷(희토류 활용 합금)을 독점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이 문제를 덜 중시했으며, 중국이 마그넷을 안주면 우리는 부품을 안 주었다. 이제 미중 양국은 진전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나 가까운 미래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 MBC, 2025년 8월 26일자. <https://www.youtube.com/watch?v=wF4MOgUNP9k>.

현재 상황으로 미중 경제관계, 그리고 10월 말 예정된 미중 관세협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는 8월 말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중국의 유학생도 받아들일 것이다. 바이든 때 미국은 중국을 드라이 크리닝 하는 수준으로 다뤘다. 그러나 지금 양국관계는 탄탄하다”고 말했다.²⁵

10월 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현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고율 관세 등 강력한 무역 제재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자신이 조만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4% 상호관세와 중국 대응 조치의 90일 연기는 미중 경제관계의 안정과 세계 경제 발전 및 안정의 안정성을 더해 줄 것”²⁶이라고 화답한 가운데 10월 말까지 어떤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3. 한중 경제관계: 대중 무역적자 및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영향 가능성 확대

3-1. 무역: 대중 수출 불안정과 수입 확대 지속으로 3년째 무역적자 기록 중

최근 수년간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반도체) 경기 변동과 COVID-19의 영향 등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3년째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²⁷. 2025년 상반기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비 4.6% 줄어든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대세계) 수출증가율이 0.0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진한 실적이다. 다만 대중국 수출 부진은 전년도(24년)의 높은 수출증가율 6.6%에 따른 역기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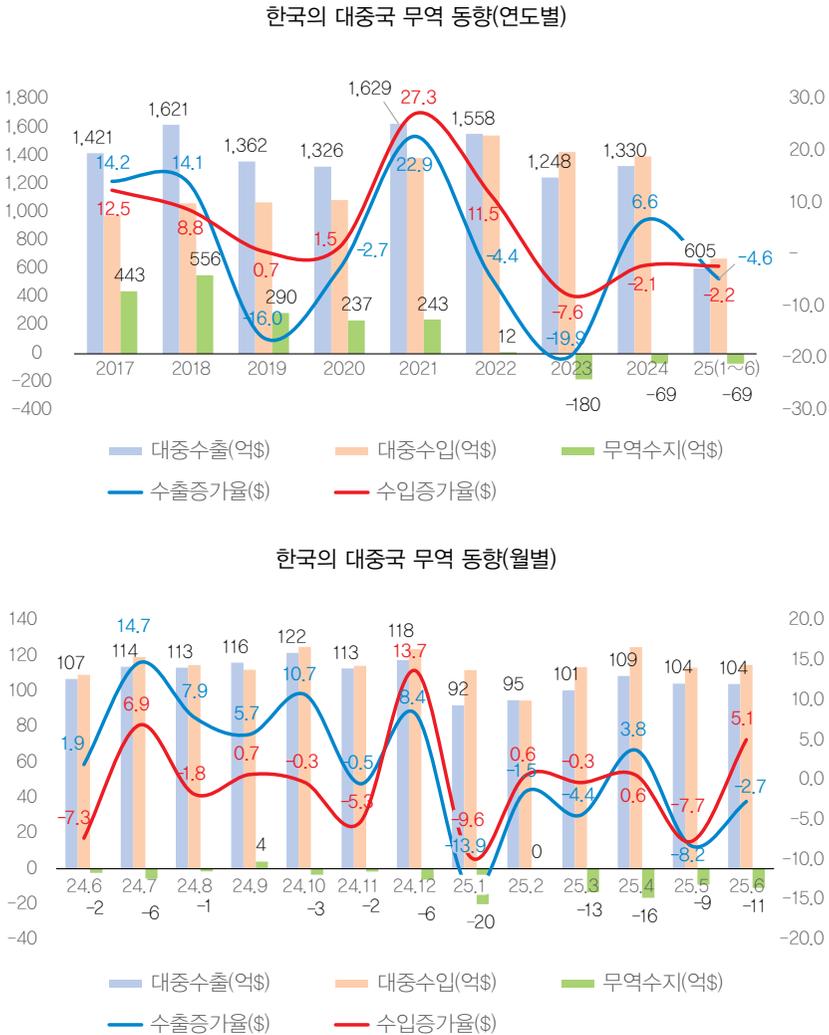
25. 같은 회견.

26. 중국 상무부 대변인 기자회견, 2025년 7월 30일자.

27.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II(경제·산업 분야)”, 국회 입법조사처, 2025년 9월 11일자, p. 271.

효과에 따른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중국 측 집계 기준으로도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0.1% 증가).²⁸ 이렇듯 추세적으로는 '21년과 '22년의 COVID-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림 5 한국의 대중국 무역 동향(연도별 및 월별)



출처: 한국무역협회.

이런 가운데 3년째 계속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중국 무역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년 전부터 대중국 수입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최근 2~3년간에는 대중국 수출이 급등락한 데 반해 대중국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수출에 비해 대부분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고 최근 2~3년간 대중국 수출에 비해 수입의 변동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대략 4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체로 양호한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IT·전자 부품과 제조장비는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수출품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세부 품목별로 다양하긴 하지만, 또 다른 주력 수출 분야인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세부 품목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대체로 약간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화장품 및 미용제품이 양호한 수출 실적으로 올리고 있는 점이다. 화장품은 '24년 기준 대중국 수출 10위 품목으로 대중국 수출 상위 20대 품목 가운데 유일한 소비재, 특히 일상 생활용품(비내구소비재)이다.

우리의 대중국 수입 구조에서는 반도체를 필두로 2차전지, IT·전자 완제품(노트북, 스마트폰 등)과 중국 내 가공생산을 거친 재수입품(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전자공업용 도프처리제품, 각종 전자부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입품 가운데 과거에 없던 신형 소비재가 주목된다. 최근 2년간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위 수입 품목 자리를 지키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와 최근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목을 끈 바 있는 전기승용차 등이 그 예다. 특히 전기승용차는 2024년 8위의 수입 품목이었으며 '24년과 '25년 1~6월 각각 87.7%와 31.6%의 급속한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8. 중국 해관총서 집계 기준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홍콩을 통한 중국행 우회수출도 포함되어 있다.

표 5 중국의 대한민국 주요 수입품목(상위 20개)

순번	HS코드	품목명	2024년			2025(1~6월)		
			수입액(억\$)	증가율	구성비	수입액(억\$)	증가율	구성비
		총계	1,819.0	11.9	100.0	859.4	0.1	100.0
1	854232	메모리	452.2	31.1	24.9	231.2	0.4	26.9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56.9	36.5	14.1	129.2	13.0	15.0
3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	95.4	4.4	5.2	41.4	-11.3	4.8
4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다 부분품	84.0	22.1	4.6	31.5	29.7	3.7
5	847330	컴퓨터 부분품과 부속품	48.1	63.4	2.6	23.0	4.8	2.7
6	290243	파라-크실렌	39.3	-2.6	2.2	16.1	-16.5	1.9
7	854233	증폭기	34.7	-3.4	1.9	13.1	-10.0	1.5
8	290220	벤젠	21.7	51.2	1.2	12.2	51.1	1.4
9	852412	OLED	21.2	31.6	1.2	10.1	12.7	1.2
10	330499	기타 미용/화장용 제품류	18.3	-5.1	1.0	9.8	6.3	1.1
11	290121	에틸렌	14.0	69.3	0.8	7.9	28.7	0.9
12	271019	경질석유	16.3	-12.8	0.9	7.8	2.3	0.9
13	284290	무기산염, 과산화산염	20.6	-53.6	1.1	7.6	-39.9	0.9
14	848620	반도체제조장비	16.2	32.6	0.9	7.5	-4.5	0.9
15	847170	기억장치	14.7	-27.6	0.8	7.1	-4.1	0.8
16	852411	LCD	16.9	-7.2	0.9	6.9	-21.9	0.8
17	848690	반도체 장비	11.4	40.4	0.6	6.3	27.6	0.7
18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12.9	1.6	0.7	6.2	1.4	0.7
19	851762	음성/영상 송수신/ 저장기기	18.9	20.0	1.0	6.1	-16.6	0.7
20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14.5	-0.6	0.8	5.5	-25.7	0.6
		상위 20개 품목 합계	1,228.2		67.5	586.1		68.2

출처: 중국 해관총서.

표 6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상위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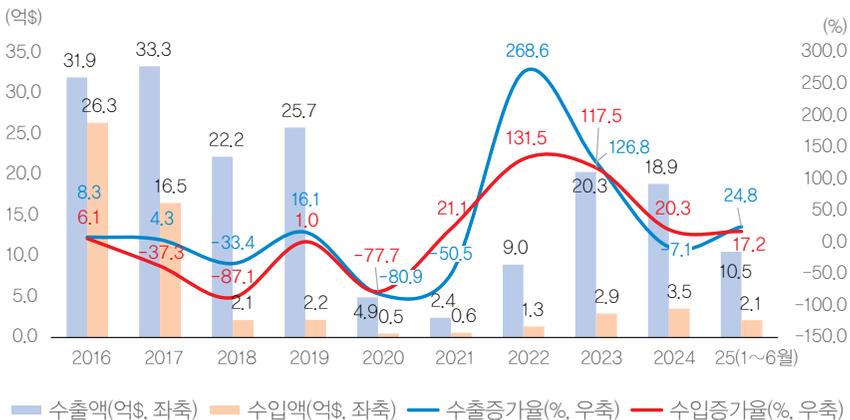
순 번	HS코드	품목명	2024년			2025(1~6월)		
			수입액 (억\$)	증가율	구성비	수입액 (억\$)	증가율	구성비
		총계	1,398.8	-2.1	100.0	674.0	-2.2	100.0
1	854232	메모리	158.2	25.2	11.3	70.7	-8.6	10.5
2	850760	리튬이온축전지	40.5	-50.0	2.9	16.4	-19.6	2.4
3	847130	노트북	22.9	7.6	1.6	11.6	-7.7	1.7
4	851713	스마트폰	30.3	-14.9	2.2	10.1	5.6	1.5
5	730890	기타 철강제 구조물과 그 부분품	17.7	48.4	1.3	10.0	23.3	1.5
6	847330	컴퓨터 부분품과 부속품	22.3	60.1	1.6	9.6	-4.6	1.4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9.3	-29.8	1.4	9.5	6.1	1.4
8	870380	전기승용차	11.1	87.7	0.8	8.6	31.6	1.3
9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세트 (차/항공기/선박용)	16.0	-9.0	1.1	8.4	3.4	1.2
10	282590	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금속과산화물	24.8	-37.8	1.8	8.0	-46.0	1.2
11	852491	LCD	19.1	20.7	1.4	8.0	-27.0	1.2
12	854239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회로 부분품	14.1	3.6	1.0	7.9	7.3	1.2
13	381800	전자공업용 도프처리제품	8.8	10.6	0.6	7.1	137.4	1.1
14	284190	석산염, 티탄산염, 안티몬산염류	10.1	-59.9	0.7	6.5	-3.1	1.0
15	853400	인쇄회로	12.5	0.5	0.9	6.3	7.5	0.9
16	732690	철강제 기타제품	10.4	6.0	0.7	5.6	11.1	0.8
17	850440	정지형 변환기	11.7	8.6	0.8	5.5	3.5	0.8
18	850110	전동기 (출력 37.5W이하)	8.4	2.1	0.6	5.1	93.8	0.8
19	847150	디지털형 처리장치	8.8	-5.2	0.6	4.2	-8.0	0.6
20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다 부분품	7.6	11.4	0.5	4.1	9.5	0.6
		상위 20개 품목 합계	474.7		33.9	223.3		33.1

출처: 중국 해관총서.

3-2. 북중 무역: 북중 간 무역 회복과 국제분업(가공무역) 재편

최근 중국의 한반도 교역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북중 무역의 급속한 회복이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58.2억 달러와 49.8억 달러에 달했던 북중 간 수출입액은 미국의 북핵 개발 관련 대북 제재로 2018년 24.3억 달러로 급감한 바 있으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2022년에는 사실상 중단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던 북중 무역규모가 2023년 이후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16.8%와 117.5%나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역기저효과로 무역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상당한 규모를 유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 중국의 대북한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각각 24.8%, 1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의 대북한 핵 관련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년과 2017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1~2년 내에 당시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억 달러, %)



출처: 중국해관총서.

그렇다면 어떤 품목이 북중 무역의 회복을 주도할까? 수출입 통계 분석 결과 중국과 북한 간에 경공업 생활용품을 둘러싼 국가 간 가공무역이 복원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우선 중국의 대북한 수출에서는 가발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인모, 가발용 양모, 방직섬유재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뿐 아니라 2025년 상반기 11.7%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품목은 식품(대두유, 설탕, 밀가루, 꿀 등)이나 일상생활용 소비재로 매우 적은 양이다.

표 7 중국의 주요 대북한 수출품목(상위 10개)

순번	품목명	HS코드	2024			2025(1~6월)		
			수출액 (만\$)	증가율	구성비	수출액 (만\$)	증가율	구성비
총계			188,546	-7.1	100.0	105,310	24.8	100.0
1	인모, 가발제조용 양모, 방직섬유재료	670300	16,890	5.3	9.0	12,280	33.0	11.7
2	대두유와 그 분획물	150790	9,417	37.2	5.0	4,752	37.5	4.5
3	염화비닐 바닥 깔개, 벽피복재	391810	4,232	-8.8	2.2	1,129	-29.1	1.1
4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540769	3,441	-2.2	1.8	1,818	8.1	1.7
5	염색직물	540752	2,962	56.9	1.6	1,967	67.6	1.9
6	합섬재 니트사	600632	2,882	-20.5	1.5	2,226	89.6	2.1
7	사탕수수당, 사탕무우당	170199	2,428	-65.0	1.3	1,821	61.8	1.7
8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	401120	2,202	-8.4	1.2	1,473	66.0	1.4
9	글루탐산, 그 염	292242	2,078	11.8	1.1	1,051	13.8	1.0
10	침실용목제가구	940350	2,060	29.7	1.1	906	18.9	0.9
상위 10개 품목 합계			48,592		26.0	29,423		28.0

출처: 중국 해관총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는 중국산(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가발용 원자재를 이용해 만든 가발류(가수염, 눈썹 등)가 절반 가까운 비중(25년 1~6월, 47.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지하자원이나 가공식품으로 얼마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이전 활발했던 섬유 의류분야 국제분업(가공무역)이 6~7년이 지난 뒤 가발류 산업을 둘러싼 북중 가공생산 무역으로 재편 및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²⁹

표 8 중국의 주요 대북한 수입품목(상위 10개)

순번	품목명	HS코드	2024			2025(1~6월)		
			수입액(만\$)	증가율	구성비	수입액(만\$)	증가율	구성비
총계			35,167	20.3	100.0	21,034	17.2	100.0
1	인모제가발, 가수염, 눈썹 등	670420	18,023	10.3	51.2	9,997	-5.2	47.5
2	텡스텐광과 그 정광	261100	3,145	21.2	8.9	1,267	-6.7	6.0
3	페로실리콘	720221	2,282	-27.7	6.5	1,205	56.6	5.7
4	전기에너지	271600	2,220	-0.3	6.3	1,429	34.1	6.8
5	기계식표시워치 무브먼트	910811	1,628	301.4	4.6	1,094	41.6	5.2
6	몰리브덴광과그정광	261390	1,448	113.4	4.1	808	27.5	3.8
7	기타특수품목	980400	984	49,065.2	2.8	807	123.6	3.8
8	합성제가발, 가수염, 눈썹 등	670419	739	176.9	2.1	644	110.7	3.1
9	탄화규소	284920	584	8.5	1.7	253	5.4	1.2
10	기타화학제품	382499	458	4,658.1	1.3	851	290.5	4.0
상위 10개 품목 합계			31,511		90.0	18,356		87.0

출처: 중국 해관총서.

29. 미국이 대북한 제재를 실시하기 전인 2016년과 2017년 북중 간에는 의류 등 분야를 둘러싼 가공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2017년의 경우 중국의 대북한 수입 10대 품목 가운데 4개 품목이 스포츠의류, 바지, 수트 등이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수출품 중에서는 편직물, 합성섬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 이용)

3-3. 한중 경제관계 및 통상 이슈: 한중 FTA 협상, 희토류 수출 통제 대응

A. 한중 FTA 후속 및 2단계 협상

한중 FTA 협정 발효 시(2015.12) 양국은 FTA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하며 협상 개시 2년 이내에 후속 협상을 타결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실제로 한중 FTA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잠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2025년 중반 현재 총 14회의 후속 협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사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의 기본 내용은 거의 결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한중 고위급 회담 및 한중 정상 방문 계획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한중 무역통상 관련 첫 번째 사안이기도 하다. 한편 한중 FTA 협정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FTA를 체결할 때 우선 체결 후 점진적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해 가는 이른바 점진적 후속 보완형 협정 전략을 추진해 온 국가이다. 실제로 한중 FTA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타결, 발효된 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이미 3년 전에 업그레이드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중-아세안(ASEAN) FTA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드 협상을 진행, 타결시킨 바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FTA ‘후속협상’, ‘2단계 협상’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중 간 고위급 회담이 본격 진행되거나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한중 FTA 후속 혹은 2단계 협상 논의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방중한 이재명 정부의 특사단(단장 박병석)은 왕윈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을 만나 한중 FTA 2단계의 조속한 협상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⁰

30. “특사단 ‘시진핑, 김정은지않는 한 방한…한한령 해제엔 산 확인(종합),” 연합뉴스, 2025년 8월 27일자.

B.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의 한중무역 영향 가능성

중국이 미중 관세 갈등 과정에서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제품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번 조치 자체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앞으로 중국이 <(군민) 양용물자 수출 통제 조례>를 실시함에 있어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 50여 개 품목(HS10단위 기준)을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조치였다. 실제로 앞에 소개한대로 이 조치 실시 후 중국의 희토류 제품 대미 수출이 감소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 폭증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폭증이 동 조치의 파급력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의 실제 충격 가능성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동 조치가 한국의 대중 희토류 관련 제품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고 중국 정부도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국제 민간분야 시장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조치의 핵심 내용이 관련 품목의 수출에 대한 국무원의 건별 심사와 허가인 만큼 우리의 관련 품목 수입에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7월 24일 방중한 이재명 정부의 중국특사단은 25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에게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적 광물자원 수출 통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대중국 통상 및 협력 강화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평가

2025년 상반기 중국 경제는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우선 어려움 속에서도 5% 초반대의 높은 성장률과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산업경쟁력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주는 영향은 중립 내지 양면적이다. 대외경제 면에서 중국의 성장과 공급망 장악력 강화, 그리고 중국이 다소 우세한 입장에서 진행 중인 미중 협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도 중립 내지

양면적이다. 한중 간 국제분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 확대는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지만 한중 기업 간 경쟁 격화는 우려 요인이 된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도전과 압박이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희토류 등에서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 확대는 우리에게 분명한 위협요인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다소 우위에 있어 보이는 미중 협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미국의 대세계 및 대중국 관세 공격이 약화될 계기가 될 수 있고 중국 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경제관계의 영향은 중립 내지 다소 부정적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 확대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추세적 약화와 대중 무역적자 고착이 지속 내지 강화될 것이다. 북중 간 무역 확대와 ‘신형 국제분업’ 형성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긍정적이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평화에도 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 중국 경제 및 대외경제 관련 동향과 리스크 평가표

분야	점검사항	내용과 평가	영향 (중국발 리스크의 성격)
경제	거시경제 동향	상반기 양호, 하반기 다소 불안정	긍정적
	산업 경쟁력·성과	실적 양호, 후속 정책 구체화	부정적
대외 경제	무역(수출) 실적	최대 교역국 부상, 최고 수출경쟁력	중립(양면적)
	공급망	전략산업 공급망 장악 및 활용	중립(양면적)
	통상	대미 협상력 강화	중립(양면적)
한중 경제 관계	무역 동향 (한중, 북중)	대중 수출 불안정, 3년차 대중 적자 북중 무역 회복 및 新국제분업 형성	중립(다소 부정적)
	한중 간 통상 이슈	한중 FTA, 전략산업(희토류) 관련 우호적 태도	긍정적 - 대한 정책 우호적

제4장

중국 대외 관계와 안보 위협 요인

이동률 | 동덕여대

문제 인식

2025년 전반기 한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다수의 국가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는 트럼프 정부의 예상을 넘어선 거친 통상 압박과 그에 따른 협상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맞서 마치 준비해 왔던 것처럼 사안별로 맞대응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가고 있다. 미중 양국은 5월 10일 제네바(Geneva)에서의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런던(London), 스톡홀름(Stockholm), 그리고 9월 14일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네 번째 협상을 진행했고 10월 말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치열한 외교전에 대비하면서 물밑 탐색 과정에 있다.

상반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예상과 달리 미중 간 직접적인 대립과 충돌은 전개되지 않았다. 특히 갈등이 우려되었던 대만문제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1기와는 달리 아직은 중국을 의식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뚜렷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미중 간 대화가 시도되었다. 중국 국방부장 동원(董軍)과 미국 국방부장 헤그세스(Pete Hegseth) 간 화상 통화(9월 9일)와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간 전화 통화(9월 10일)가 이어졌으며 APEC 정상회담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되었다.

미중 간의 통상 협상이 만일 10월 말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대립과 협상 등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본격적인 안보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은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공세는 자제하면서, 다른 한편 유럽,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변국 등을 향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응을 모색 및 준비하고 있다. 시 주석은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5월 23일),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5월 26일),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8월 8일),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8월13일)과 연이어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중국은 5월 13일 중국-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럼 장관급 회의 주최, 8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주최, 9월 3일 전승절 행사, 그리고 9월 9일 브릭스(BRICS) 화상 정상회담 참석 등을 통해 일관되게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일방주의’를 향해 우회적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 대상과 우군을 확대해 가고자 했다.

한중 간에는 6월 10일 첫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양국의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강조하여 협력의 기대감을 표출했다. 동시에 상호 상대에 대한 상이한 기대와 요구도 제기되어 기대만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그리고 8월 26일 박병석 전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중 특사단이 파견되어 중국 왕이 외교부장, 한정(韓正) 국가부주석과 회동하였다. 한중 외교 장관은 7월 29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서 9월 17일 조현 장관의 방중을 통해 회담이 진행되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전방위적으로 대외 관계를 펼쳤다. 그 가운데 한국과 한반도 안정 관련 중요한 이슈인 전승절 행사,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대만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에서 대중 외교의 도전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2025년 중국 대외 관계 추세와 주요 동향

1.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와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1-1. 북-중-러 연대의 현실과 제약

중국은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3국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한자리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하는 매우 이례적인 모양새를 연출하였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이러한 모양새를 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중국이 한-미-일에 대항하여 북-중-러 연대 강화를 주도하여 신냉전 구도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우려도 있다.

그림 1 202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모인 북-중-러 정상



출처: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를 도모하여 미국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 압박과 공세를 펼치는 미국을 겨냥하여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에 반대한다고 하여 북한의 ‘신냉전’ 주장과는 다른 입장에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중국이 북-중-러 연대 강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3국 정상회담을 주도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다. 중러, 북중, 북러 양자 정상회담은 진행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북-중-러 3국 협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전승절 기념식에서 직접적으로 반미, 반서방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으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협력을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우회적으로 미국을 겨냥하는 데 그쳤다.

중국은 북-중-러 연대가 가져다줄 실익보다는 그로 인해 초래될 비용과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에게 관리해야 할 중요한 우군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는 외교적 부담이 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과도하게 밀착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이미지와 위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인 유럽 등 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미국과의 대립과 경쟁이 격화되는 것도 중국은 원하지 않고 있다. 북-중-러 연대를 실질화·제도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3국 가운데 중국인데 중국이 이러한 유보적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중-러 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도열한 모습을 구태여 연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항일전쟁 승리라는 전승절 행사의 역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내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 체제에 대한 지지와 결집을 이끌어 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전승절 행사에서 ‘좌 김정은, 우 푸틴’의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인민들에게 사회주의권의 맹주로서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위상과 역할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공세와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진핑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첨단 군사 장비를 총동원하여 중국의 힘을 인민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둘째,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세계의 다극화’를 과시하면서 간접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단극체제에 대해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중국은 2023년 12월 5년 만에 개최된 중앙외사 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會議)에서 지난 10년의 시진핑 외교를 점검하면서 향후 5년을 겨냥한 글로벌 외교 구상과 설계를 내놓았다. 당시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외교 구상의 키워드는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포괄적인 경제 세계화’ 추진이었다.

중국은 SCO 정상회담과 전승절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두 개 글로벌 구상을 재차 강조하였다. 즉, 시진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의 다극화’ 주장을 감안하면 전승절 행사에 앞서 열린 텐진(天津) SCO 정상회담이 대외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전승절 행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러 3국 지도자의 도열을 통해 중국은 북-중-러 3각 연대보다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세를 강화하고 과시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구상은 외형적으로는 장기 세계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그 이면에 미국의 공세와 압박에 직면하여 중국이 ‘발전권’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대외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 못지않게 경제 세계화도 함께 강하게 주장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공세에 대응하여 중국의 경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림 2 2025년 텐진 SCO 정상회담



출처: 연합뉴스.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를 기치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차단 공세에서 경제 세계화라는 의제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다. 내수 중심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유럽 등 국가와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 주석이 북-중-러 3국 지도자를 한자리에 배치한 것은 미국을 향해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의식하여 북-중-러 연대의 실질화·제도화는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중국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우군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외교적 실익을 보장하는 최대의 협력 대상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국내 발전이 최대의 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북-중-러 연대보다는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서방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우선순위에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복잡 미묘한 입장은 북한과 러시아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뒷배를 다지기 위한 사전 포석이 필요했고 어떤 면에서는 중국 전승절 참석을 통해 트럼프를 자극하여 협상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둘째,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국제 다자무대에 등장하여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의존했던 제재 완화와 경제 희생의 과제를 국제무대에서 협력 가능한 범위와 대상을 확장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셈법이 있었다. 아울러 러시아는 중국이 주장하는 세계 다극화와 공조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 주장에 힘을 얻고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장기 전략 구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경쟁과 갈등의 불씨가 잠복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컨대 북-중-러 3국은 의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중-러 3국 연대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모두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서로 상이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저변에 깔려 있다. 아울러 북-중-러 3국은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이한 심지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장기 전략 구상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러 3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모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북-중-러 3국 연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1-2. 북-중-러 연대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중-러 3국 관계의 동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그 동향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냉철하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북-중-러 연대는 외형상 나타나는 움직임에 비하면 많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냉철하고 꼼꼼하게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관찰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북-중-러 연대가 현실화되고, 한-미-일을 직접 겨냥하고, 중국이 반미, 반서방 연대를 추동할 것이라는 분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영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명료하지만 과도한 단순화와 그로 인한 정교하고 다양한 전략 수립의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중국이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양한 변수를 상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 흐름에서 전승절 행사도 진행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반미, 반서방 그리고 냉전 구도로 단순 치환해 버리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단선적 대응으로 몰려갈 우려가 없지 않다.

중국이 전승절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계기로 첨단무기를 과시하고 북-중-러 정상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위세를 떨쳤다고 해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반미, 반서방 일변도(一邊倒)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공세와 압박에 직면하여 북-중-러 연대를 넘어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특히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한 신흥경제권,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외교에 적극적이고 유럽을 향해서도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미국과의 협상에 치밀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분단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에는 강한 냉전의 기류가 압도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한반도처럼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시로 각성할 필요가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것은 향후 전승절 행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 간에 일련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의 변화 등에서 일정 정도 유연한 전략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제시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한반도에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신냉전 구도가 조성되는 것은 한국에게 군사 안보적 불안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외교 영역과 역할을 위축시키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북-중-러 연대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회복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다자무대에 등장한 것은 향후 북한이 무모한 도발만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대화의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북-중-러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협상 등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창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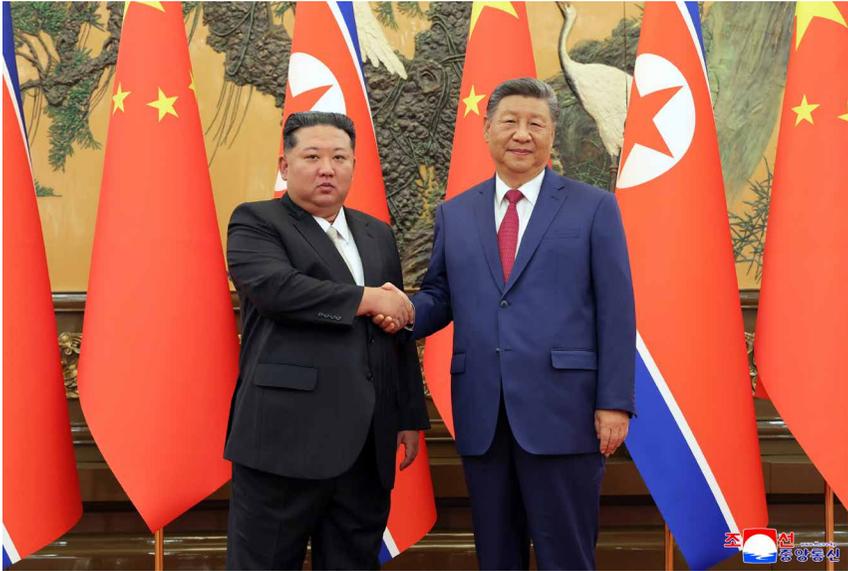
2. 북중 정상회담 의미와 영향

2-1.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주목을 끌었던 장면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특별 예우를 통해 북중 관계의 긴밀함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위한 4박 5일 일정의 베이징 방문은 2019년 1월 4차 방중 이후 6년 8개월 만이고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6년 2개월여 만이다.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특히 최고의 예우를 해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 다자무대 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북러 관계의 밀착과 대비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던 북중 관계가 일거에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 2025년 9월 4일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



출처: 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은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특급 의전을 제공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푸틴과 함께 텐안먼(天安門) 망루 중앙에 자리를 배치했고, 리셉션에서도 시 주석 부부 옆 좌석을 제공했다. 특히 다른 정상들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유일하게 국민 방문에 준하는 예우에 해당하는 별도의 단독 만찬회담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러한 특급 예우는 전승절 참석에 대한 감사 표시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으로 양국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공조하면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대규모 전승절 행사가 국내용의 성격이 강하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도 국내 선전용의 성격이 뚜렷해 보였다. 양국 모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특급 예우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과 언행을 행사 전후로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노골적으로 김정은의 국제 다자무대에서의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했다. 시진핑, 김정은 양 지도자는 행사 참석과 특급 예우라는 주고받기로 이번 전승절 행사를 국내 리더십과 체제 강화를 위한 이벤트로 적극 활용하는 데 상호 협조했다.

그림 4 북중 정상회담 이후 연회에 참석한 시진핑과 김정은



출처: 연합뉴스.

둘째, 북중 양국은 양국관계가 이번 전승절 행사와 이어진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했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그런데 사실 양국관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계기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났다. 2025년 2월 18일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례적으로 평양의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조·중 양국 사회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새롭고 더 큰 성취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양국이 교류·협력을 강화해 조·중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³¹ 왕야권(王亞軍) 대사가 박명호

31. “王亞軍會見朝鮮外務省副相樸明浩”, 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大使館, 2025년 2월 19일자.

부상과의 만남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무적 협력 심화”를 언급한 것은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과 의도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즉,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미국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 총액은 올해 1~7월 14억6,58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류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었다. 요컨대 북중 관계 회복의 주된 동인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었고 전승철 행사를 계기로 확인된 것이다.

셋째, 북중 양국은 미국 변수가 관계 회복의 주된 동기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양국이 미국 변수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전략적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있어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의 돌발적 언행과 정책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가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2018년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현상변경 과정에 당혹해했던 경험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결과적으로 ‘하노이 노딜’로 인해 곤경에 처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 변수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 중국과 북한은 동일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다. 최소한 양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정세에서 양국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는 말아야 하고 전략적 소통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북중 양국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는 단순히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차원보다 더 복잡하고 상이한 전략적 고려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한을 넘어서 북한에게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중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재차 ‘전략적 소통 강화’를 북한에게 우선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북한 역시 자국의 문제를 놓고 미중 양 강대국이 타협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과거 미중 관계가 갈등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적 입장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미중 양국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고강도의 제재를 담은 ‘UN 안보리 결의안 2375’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북한은 지금까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록 미중 간의 타협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해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차선책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이후 연이은 북중 정상회담은 비록 중국이 주도했지만 북한 역시 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뒷배를 과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견인하고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과시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전통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요청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UN 제재를 완화하고 대규모의 실질적 경제지원이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³² 요컨대 북한은 이번 방중에서 교역 확대, 중국 관광객 유치,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면서 경제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이번 방중단에 경제관료들

대거 포함한 점도 경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일단 중국은 공개적으로 자국이 동의한 UN 결의안을 훼손해가면서 지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면서 유독 UN의 가치를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요한 통상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UN 제재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구체적인 협력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목도하면서도 북한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는 않았다. 역대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지원을 해온 것이 관행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제재국면이 아니었을 때도 북한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경제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2-2.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 경제지원의 한계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특별 예우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보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대신 ‘안정’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UN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양측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익을 지켜 나가길 원한다”고 화답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비핵화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32. “習近平同朝鮮勞動黨總書記、國務委員長金正恩舉行會談。”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5년 9월 4일자.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객관적·정당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는 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내용이 중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 측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중 양국 사이에는 북핵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상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국이 정상회담의 논의 의제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 하노이(Hanoi)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입장 변화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22년 발리(Bali) 미중 정상회담에서부터이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한반도 3원칙’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고 미국, 한국과의 논의에서도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특별히 새롭게 입장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핵 문제를 의제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승인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간접적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초래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결국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개발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 동북(東北), 화북(華北), 베이징(北京), 톈진 등 주요지역에

심대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 주장을 승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이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굳이 이를 표면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 역시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북핵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중국 역시 미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회피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향해 어떠한 협상과 압박 카드를 펼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북중 양국 모두 선불리 반미를 공개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가기는 쉽지 않다. 북중 관계 강화가 양국이 최우선시 하는 대미 협상에서 자산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될지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의 상대에 대한 전략과 정책 역시 상당 부분 대미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도 그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북중 양국은 관계 개선의 동기는 있지만 그 저변에는 여전히 동상이몽의 복잡한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어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중국과 북한이 북핵 승인과 UN 제재의 완화라는 장애물을 무리해서 구태여 돌파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경제협력을 진행하여 북핵에 대한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를 강화하고 제재의 공식적 완화 없는 사실상의 완화 효과를 얻는 현실적인 방법으로의 타협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갈 가능성도 있다. 북중 양국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점진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도 완화되어 가는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대비도 중요하다.

3. 미중 간 대만문제의 불확실성

대만문제는 트럼프 정부 1기때 당선인 신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을 기점으로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이후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 2기 집권 시에도 트럼프 정부가 더욱 강하게 대만 이슈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2024년 페루 리마(Lima) 미중 정상회담과 2024년 12월 왕이 연설에서 연이어 미국을 향해 이른바 대만문제, 체제와 제도, 민주인권, 그리고 발전권이라는 4개의 레드라인(red-line)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추구하지만 4개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4개 레드라인은 기존의 안보, 주권, 발전의 3대 핵심이익보다 더욱 명확하게 대만문제를 적시하여 중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를 향해 대만문제와 체제에 대한 공세를 가장 경계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중국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정부의 국방 인사들은 연이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예컨대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이를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비어 브룬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은 8월 8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우리 목표와 동맹국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막는 규정은 없다”며 주한미군을 대만사태 등 역내 분쟁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 조정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1기 때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대만문제에서 예상 외로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6월에 예정되었던 대만 국방부장과 미 국방차관 회담을 취소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측이 당시 이란 공습 문제를 이유로 취소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정상회담 추진을 의식한 취소라는 보도가 나왔다. 8월 중국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미국과 대만 국방부 당국자들이 회담을 했지만 이 또한 중국을 의식하여 알래스카(Alaska)에서 비밀리에 격을 낮추어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8월 초 예정되었던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여 중남미 수교국을 순방하려던 일정이 돌연 취소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대만 총통은 중남미 순방 시 미국 정계 고위인사와의 비공식 정치 교류를 위해 미국 경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향후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려에서 불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억 달러 상당의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 승인을 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가 보도했다. 오히려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차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대만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만은 2026년 국방예산을 22.9% 늘렸지만 GDP의 3.32%에 불과해서 미국의 압박에 크게 미흡하다. 미국은 대만에게 무기 공여가 아닌 구매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반도체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2025년 4월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인 40.5%가 미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2024년 7월 24.2%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관련하여 대만민의를기금회(台灣民意基金會)가 8월 4~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3.3%로 취임 이후 최저로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진과 반중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이다.

표 1 대만인의 부정적 대미 인식 및 라이칭더 지지율 변화(2024~2025년)

연도	부정적 대미 인식	라이칭더 지지율
2024년	24.2% (2024.7월)	58.9% (2024.8월)
2025년	40.5% (2025.4월)	33.3% (2025.8월)

출처: “執政百日 賴清德贏得近6成信任 民調亦有逾7成臺人反對統壹,” RFI, 2024년 8월 28일자.; “Taiwan’s Growing Distrust of the United States,” GMF, 2025년 8월 18일자.; “台灣民意基金會民調／民怨如火山爆發！賴清德滿意度剩33.3% 本命區台南也失守,” RW NEWS, 2025년 8월 12일자.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주요한 배경은 미중 관계가 전략 경쟁 양상으로 확장되면서 양국 사이에 큰 틀에서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왔던 대만의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신뢰가 약화 내지는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시진핑 정부가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를 훼손하면서 점진적으로 대만 라이칭더 정부의 독립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원할 강한 동거나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국 역시 무리하게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만의 여론 역시 대만 독립의 공식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 굳건하지 않은 않다.

미중 양국 모두 근본적 해결이 난망한 대만문제로 인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회피하고자 한다. 요컨대 대만문제는 향후 복잡한 변수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문제가 한국 외교에 예상치 않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해협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이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기존에 밝힌 원론적 입장, 즉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인 미중 관계의 전체적인 변화 기류, 중국의 국내정치 경제 상황, 대만 내의 여론 동향,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만문제에 대한 진위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교차 분석하면서 한국의 장기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대응해 가야 한다.

평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양국 정상이 6월 10일 전화 통화로 사실상 상견례를 했다. 양국 정상의 짧은 통화에서도 상대국에 기대하고 요청하는 중점 현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시 주석이 강조한 내용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공동 수호, 그리고 공급망 안정이다. 둘째,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에 대한 존중이다.³³

요컨대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대응하면서 이를 매개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중 경쟁과 대립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중국 연대에 참여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주장하면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집중했던 전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즉,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관계 개선의 동기가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7월 28일 한중 외교장관 전화 통화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33. “習近平同韓國總統李在明通電話,”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5년 6월 10일자.

양국관계에서 정책의 안정성, 독립자주, 호혜 강화 세 가지 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³⁴ 특히 ‘독립자주와 정책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은 다분히 미국의 한국을 향한 대중 압박 참여를 사전에 우회적으로 견제하려는 메시지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하자 사실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나왔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에 한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 진행될 경우 한국은 기대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 한중 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 국면에서 오히려 갈등과 오해가 더 증폭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중 양국이 상호 상정하고 있는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호 의사를 타진하고 상호 레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황 악화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양국 간 소통 채널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³⁵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한중 관계의 오랜 난제인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시진핑의 한반도 관련 대화 내용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 응답했다. 대략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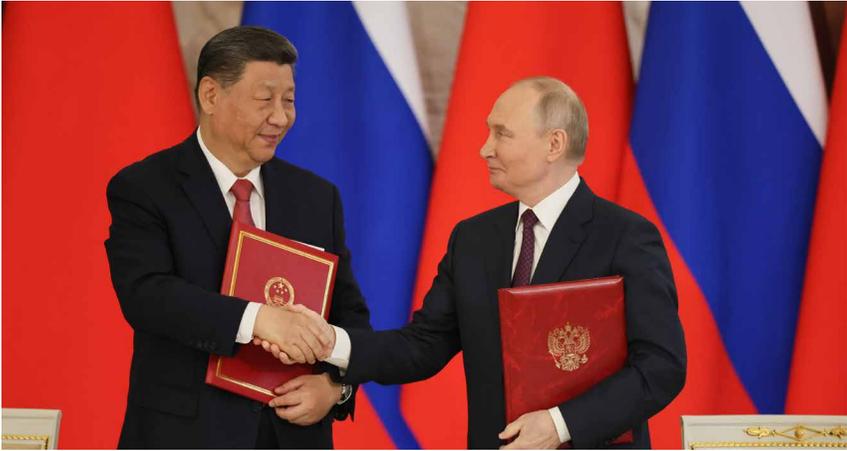
34. “王毅同韓國外長趙顯通電話,”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5년 7월 28일자.

35. 한국-중국 정상 통화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년 6월 10일자.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공식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른바 ‘한반도 3원칙’도 최근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2024년 5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³⁶고 발표하여 사실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에게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5년 5월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나 비핵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압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³⁷

그림 5 2025년 5월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출처: EPA

36. “中華人民共和國和俄羅斯聯邦在兩國建交75周年之際關於深化新時代全面戰略協作夥伴關係的聯合聲明（全文）,”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4년 5월 16일자.

37. “中華人民共和國和俄羅斯聯邦關於進壹步加強合作維護國際法權威的聯合聲明,”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5년 5월 9일자.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이 주장하는 ‘건설적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단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대화를 견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은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치적 해결’의 이면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내재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핵 문제의 책임이 있는 미국이 나서서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태도이고 해결사가 되고자 하지도 않았으며 지금까지 최대의 역할은 상황 관리를 위한 대화의 중재자였다.

한중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기대하는 대화의 촉진자나 중재자 역할을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중 관계가 개선 징후가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중국이 휘방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남북한 대화나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스폰서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북한 이슈가 직접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과의 적극적인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상호 이해

증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중 양국이 북한 관련 문제에서 지니고 있는 근원적 공감대, 즉 북한 도발이 초래할 한반도 불안정의 예방과 억지,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조치 등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제5장

중국의 군사 동향과 안보 위협

*38

문제 인식

금년 상반기 중국이 실시한 군사행동은 폭넓고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안보 위협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은 1) 올해 4월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 주변을 봉쇄하고 요충지를 타격하는 실전 능력 검증 훈련으로 실시된 중국군의 ‘해협의 천둥(雷霆)-2025A’ 군사훈련, 2) 5월에 집중 부각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심해 양식장을 포함한 인공구조물 설치와 서해상 군사 훈련, 3) 8월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인근 동해에서 ‘서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제로 실시한 ‘해상연합-2025(海上聯合-2025)’ 훈련, 4) 올해 상반기 지속적으로 외부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중국군 고위 간부 반부패 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진핑(習近平) 실권설 등이다.

중국을 둘러싸고 이뤄진 이상의 행동과 사건들은 인접국인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우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한반도와 주한미군 전략 환경에 직간접적 복합 리스크를 초래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구조적으로 재편할

38. 저자의 요청으로 익명 처리함.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상 군사훈련 역시 주한미군 기지, 인천·평택 항만, 수도권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상 연합훈련도 한미 연합 해상 작전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시·다중 위협 발생 가능성을 높여 한국군의 대응 자원 분산 부담을 증가시킨다. 끝으로 중국군 고위 간부의 연이은 숙청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시진핑 실권설 역시 중국 군부와 대내 정치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접한 한반도와 지역의 불안정을 자극한다고 보겠다.

2025년 중국 군사 추세와 주요 동향

1. 중국인민해방군 ‘해협의 천둥(雷霆)-2025A’ 군사훈련 실시 (2025년 4월 1~2일)

1-1.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 실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PLA Eastern Theater Command)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만 포위’ 및 무력시위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군은 4월 1일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 주변을 봉쇄하고 요충지를 타격하는 실전 능력 검증 훈련을 실시했다. 4월 2일에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중부·남부의 관련 해역에서 ‘해협의 천둥-2025A’ 훈련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훈련은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훈련으로 전개되었다. 중국군의 대만을 목표로 한 훈련은 ‘포위 시뮬레이션’ 전술을 도입하여 대만 북부·남부·동부를 동시에 차단하는 삼면(三面) 포위 작전 시나리오를 반복 훈련하는 양상이다. 중국군의 ‘해협의 천둥-2025A’ 훈련의 주요 목적은 첫째, 대만 주변 해역 및 공역을 봉쇄하는

‘포위 시뮬레이션’ 전술을 검증하고 둘째, 대만 주요 요충지(항구, 공항)에 대한 선제 마비 능력을 시험하며 셋째, 전시에 준하는 실전 대응능력 향상 및 신속 타격 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중국군 ‘해협의 천둥-2025A’ 훈련 내용 및 전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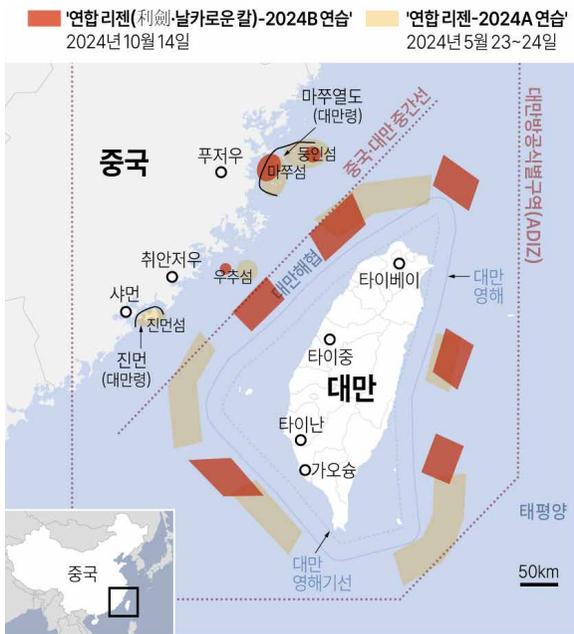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2024년 10월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 수행한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검)-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4월에 실시된 ‘해협의 천둥-2025A’ 대만 포위 훈련은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군 내 간첩 색출과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제한 등 조치를 발표한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民進黨)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이 총통은 2025년 3월 13일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을 내놓고, 중국이 대만군 내부 침투와 ‘양안 교류’를 명목으로 한 대만 내 영향력 확대, 인재 및 기술 탈취로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적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과 교류를 조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녹색(민진당의 상징색) 테러 17조’로 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번 훈련은 단기간 포위·차단·정밀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준(準) 전시’ 검증 성격을 지니며, 대만 북부·남부·동부 전역을 동시에 차단하고 대만해협 중부 및 남부 해역을 통제하는 작전 능력 숙달을 목표로 했다. 특히, 훈련 2일차 오전 돌발 공지를 통해 단기 기습성을 강조했으며, ‘식별·경고·차단·나포(Interception & Seizure)’ 과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전투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항공모함 산둥함(山東號) 전단과 H-6K 폭격기, J-20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략 자산이 투입되었으며, DF-17 극초음속 미사일 전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안·원해 장거리 화력 능력을 동시에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국방부는 발표에서 중국군이 대만을 둘러싼 해역과 공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고, 군함 13척과 해경선 4척, 군용기·헬기·무인기

(드론) 71대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 남부에서 동쪽으로 220해리(약 407km) 떨어진 서태평양에는 중국군 제2호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 8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2024년 ‘합동검(聯合利劍)’ 시리즈에서 적용된 차단·정밀타격·해경 및 민병대 연동 작전 개념을 한층 고도화한 것으로, 대만에 대한 선제적 봉쇄-정밀타격-인지전(심리전) 결합 모델을 상시화하는 전략 전환을 반영한다.

그림 1 2024년도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출처: 연합뉴스.

1-3. 대만의 대응 강화: ‘한광(漢光) 41호’ 훈련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포위 훈련에 대응하여 대만은 7월 9일부터 ‘한광 41호’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대만 사람들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만의 방어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며,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한광 41호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시위’의 성격을 명백히 지닌 것으로 중국군이 올해 4월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해협의 천둥-2025A’를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올해 한광 훈련은 평소보다 기간이 두 배 연장되어 7월 9일부터 10일간 실사격 훈련으로 실시되었으며, 참여 병력도 2만2,000여 명의 예비역을 동원하는 등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한광 41호의 핵심 목표는 중국의 ‘회색지대(gray-zone)’ 전략에 대한 현실적 대응 능력 검증이었다. 훈련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 통신망 마비, 전자전 상황을 가정해 지휘 체계 붕괴 상황에서의 독립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중국군의 해상 압박과 상륙작전을 상정한 전면전 시나리오를 도입해 HIMARS(고기동 로켓 시스템), M1A2T 전차, 패트리엇 미사일 등 미국산 신형 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주목할 장면은 도심 전투 대응 전술이었다. 지하철을 통해 병력과 장비를 신속 전개하고, 학교 및 공공대피소를 기반으로 민간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전시 상황에서 병력, 인프라, 주민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국민 방위(total defense)’ 개념이 현실로 구현된 셈이다.

2.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와 군사훈련(2025년 5월 22~27일)

2-1. 서해상 인공구조물과 부표 설치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선란(深藍) 1호’(2018년), ‘선란 2호’(2024년)와 같은 심해 양식장 및 폐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대형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구조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려 하자 중국 측은 이를 방해하였다(2.26). 중국은 당시 온누리호가 시설물 근처에 오자 고무보트 3척과 중국 해경 함정 2척을 동원해 온누리호의 항행을 조직적으로 방해

하고 고무보트 인원들은 흥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을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점유 방식과 유사하게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상 구조물 설치와 더불어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인근 등 동경 124도까지 대형 부표(浮標) 3기를 증설해 현재 총 13기의 부표가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된 상태이다. 중국은 ‘기상 관측용’으로 부표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부표 대부분에는 첨단 복합 센서가 장착돼 해양 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군사 정찰 목적으로도 운용 가능하다. 가령 부표에는 첨단 기술이 접목된 복합 센서가 장착돼 잠수함 항적 추적, 해류 분석, 해저 음파 탐지 등의 군사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 부표가 한미 해군 전력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림 2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 지도



결국 중국은 서해에 심해양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뿐 아니라 ‘바다의 정탐병’이라 불리는 부표도 늘려가며 서해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 행위로 인해 우리의 서해 관할권은 간접적·우회적인 경로로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감시, 정찰, 항로 방해 등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결국 우리의 서해 관할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2-2. 한국의 대응 방향

A.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절차 활용

중국은 서해 구조물을 최대 12기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어선의 조업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양식어업으로 인한 성장 촉진용 항생제나 폐사된 양식어, 수거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먹이나 부산물 등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어족자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우리 어선의 조업 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방해하는데, 중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과 UN 해양법협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중 어업협정의 목적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한국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B.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

우리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위협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의 무단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중간선 바깥쪽까지 규율하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국제법(한중 어업협정과 경계미확정 수역에서의 해양 활동 관련 국제규범)과 상충될 수 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경계미확정 수역으로, 국제법상 온전히 한국의 관할하에 있는 수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도 국제법상 금지되지만,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는 문제는 우리 쪽의 일방적인 입법보다는 중국과의 조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활용할 수 있다.

C.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선란 1·2호의 설치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십 년간 국제법 준수를 거부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³⁹ 일본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현상 변경 수단”이라고 논평하고 있다.⁴⁰ 한-미-일 3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단순히 양식시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고 저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3. 중국군 서해 군사훈련

중국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福建艦)은 5월 22~28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수차례 전투기 등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했다.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3곳에 사격 훈련 등을 이유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푸젠함을 포함한 중국 함대는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훈련을 하다가 해당 기간 북상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약 6일 동안 훈련을 했다.

푸젠함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로 2022년 진수했다. 배수량은 8만여 톤에 길이 320m, 폭은 73m다. 미국 핵추진 항모와 달리 원자력 엔진이 아닌 재래식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福建) 성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됐다.

39. 연합뉴스, 2025년 4월 24일자.

40. 讀賣新聞, 2025년 4월 24일자.

2024년 5월 첫 해상 시험을 실시한 이후, 실전 배치를 위해 최근까지 최소 8차례의 해상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과 부표 설치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는 중국이 ‘서해 내해(內海)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려면 미국의 증원전력을 차단하면서 북해함대의 남하 루트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중국-러시아 ‘해상연합-2025’ 훈련 실시(2025년 8월 1~5일)

3-1. 중국-러시아 해상 연합훈련 실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8월 1일부터 5일간 한반도 인근 동해에서 정례적인 양자 간 제11차 ‘해상연합-2025’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훈련은 ‘전략적 통로 안전의 공동 유지’와 ‘서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제로 하며,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新時代全面戰略協作夥伴關係)’를 더욱 심화하고,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 능력을 함께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8월에 시행된 해상연합 훈련은 중러 연례 훈련의 일환이며,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군기지 인근 해역에서 5일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훈련 종료 후에는 제6차 태평양 공동 해상 순찰 일정도 이어졌다.

그림 3 중국-러시아 ‘해상연합-2025’



출처: 연합뉴스.

2012년 이후, 중러 ‘해상연합’ 시리즈 훈련은 10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미 중러 양국 해군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해상 연합 작전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훈련은 그동안 남중국해, 동해, 오호츠크해 등 다양한 해역에서 열렸으며, 최근에는 태평양 공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훈련은 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중·미러 간 전략적 균형에 대응해 협력적 군사 역량을 과시하려는 외교적 의도와 군사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이번 훈련의 영문 명칭을 양국이 다르게 표기했다며, 중국은 ‘Joint Sea 2025’로, 러시아는 ‘Maritime Interaction 2025’로 명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러시아와의 해군 합동훈련을 중국어 ‘海上聯合(해상연합)’, 영문 ‘Joint Sea Drill’로 표기해 왔으나, 이번처럼 양국이 서로 다른 영문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3-2. 중국-러시아 ‘해상연합-2025’ 훈련 내용 및 파견 함정

중국은 ‘해상연합-2025’ 훈련에 다수의 함정을 파견했으며, 이

가운데는 새로운 함정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해군은 이번 연합훈련에 4척의 함정을 파견했으며, 수량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여러 척이 새 얼굴이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 에드미랄 트리부트(Admiral Tributs) 구축함(선번 564), 그롬키이(Gromkiy) 프리깃함(선번 335), 잠수함 구조함 이그르 베로우소브(Igor Belousov), 볼크호브(Volkhov) 잠수함(B-603)이 투입됐으며, 중국 북해 함대 사령부 소속 Type 052D형 우루무치 구축함(烏魯木齊, 선번 118), 샹오싱 구축함(紹興, 선번134), 해상군수지원함 첸다오후(千島湖, 선번 886), 시후 잠수함 구조함(西湖, 선번 841), 잠수함(210)이 참가했다. 특히 시후 잠수함 구조함은 처음으로 LR-7 잠수함 구조정을 투입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잠수함과 해칭 도킹을 실시하고, 러시아 해군 잠수함 요원을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이번 훈련 종료 후 양국 수상함 전대가 러시아-일본 간 소야 해협(Soya Strait; La Perouse Strait)과 일본 오키나와-대만 간 미야코 해협(Miyako Strait)을 통과해 태평양 원해에서 각국 해상 훈련을 병행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파견하여 이번 훈련에 참가한 주요 함정은 다음과 같다.

샹오싱함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설계 및 건조한 052D 개량형 미사일 구축함으로, 2022년 3월 취역했으며, 만재 배수량은 7,000톤 이상이다. 강력한 전장 탐지·감지 능력과 전자·수중 음향 대응 능력, 종합적인 공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함대 지역 방공과 대함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루무치함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설계 및 건조한 052D형 미사일 구축함으로, 2018년 초 해군 전투편성에 합류했으며, 만재 배수량 7,000톤 이상이다. 대해·대공·대연안·대잠전 등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함대 협동 공격(중대형 수상함), 함대 대잠전, 함대 협동 방공, 해상 순찰 및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첸다오후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 및 건조한 대형 1만 톤급 종합 보급함의 첫 번째 함으로, 2004년 4월 취역 했으며 만재 배수량은 2만 톤 이상이다.

원양 보급 능력이 우수하며, 다양한 보급 수단을 갖추고 있다.

시후함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설계 및 건조한 신형 종합 구조함으로, 정보화 통합도가 높고 모듈 탑재 능력이 강하며, 만재 배수량 1만3,000톤 이상이다. 수색 및 구조, 의료, 수리 등 다양한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간부 숙청 관련(2025년 4월 11일~6월 27일)

4-1. 중국군 고위 간부 숙청 관련 동향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6차 회의의 마지막 날인 6월 27일 마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마오 전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전국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해군 참모장인 리한쥘(李漢軍) 중장의 전국인대 대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반부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3월 11일 전국인대 폐막식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월 11일자 보도에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 부주석이 구금된 상태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이래 고강도 군 숙청을 벌여 왔다. 시 주석 집권 1~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문화대혁명 기간 숙청된 장성보다 많다고 전해진다. 이 기간 숙청된 인물은 대부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계열을 비롯해 시 주석과 라이벌 관계 파벌 인사였다. 중국은 군이 당에 충성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경쟁이 벌어져 왔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 반부패 숙청의 양상은 달라졌다. 2024년 6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고 제20차 당대회 대표 자격과 장군 직위를 박탈당한 웨이펑허(魏鳳和),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은 시 주석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신화통신은 리샹푸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부장이 막대한 금품을 받았으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범죄자”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에 따르면 리샹푸 전 부장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리 부장의 경우,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3’에 대만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 양성한 로켓군의 부패 양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시 주석이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군 반부패 수사가 권력 기반 문제를 넘어 실질적 전투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마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낙마는 중국군 고위 간부 숙청의 전환점으로 주목받았다. 마오 전 위원은 시 주석의 심복이자 푸젠성 근무 시절 인맥을 의미하는 ‘푸젠파(福建幫)’의 대표적 일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4-2. 중국군 고위 간부 배경과 파벌 분석

중국인민해방군 지도부는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이 주요 직위를 맡는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출신지, 과거 근무지, 중시 분야를 기준으로 구성된 특정 인맥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시진핑의 통치 기반과 권력 집중 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고위 군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내부 정화와 동시에 파벌 내 권력 재조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군의 주요 파벌은 푸젠파, 산시파(陝西幫), 군공파(軍工幫) 등 3대 파벌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푸젠파는 시진핑이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약 17년간 푸젠성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인물들이다. 시진핑은 중앙 정계에 진입한 이후, 자신이 근무했던 푸젠파 저장(浙江)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군 인사와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들은 ‘푸젠파’ 또는 ‘민장파(閩江幫)’로 불린다. 최근 숙청된 중앙군사위 위원 마오화와 전 국방부장 허웨이둥은 푸젠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둘째, 산시파는 시진핑이 아버지 시중선(習仲勳)을 따라 유년 시절을 보낸 산시성(陝西省)과 관련하여 인연을 맺은 인물들로 구성된다. 시진핑은 산시성 출신을 다수 중용하였으며, ‘산시파’의 대표적 군부 인사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 위원인 류전리(劉振立) 등이 있다.

셋째, 군공파는 시진핑 집권 이후 군사기술 발전을 중시하고 ‘군민융합’을 강조하면서 항공우주, 군수산업, 군사과학기술 연구 등 배경을 지닌 군부 기술관료들이 적극 중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요 직위에 오르며 집단을 형성하게 된 인물들이다. 군공파의 대표적 인물로는 로켓군 사령관과 국방부장을 역임하고 숙청된 웨이평허와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과 국방부장을 역임하고 숙청된 리샹푸 등이 있다.

4-3. 중국군 고위 간부 숙청에 대한 평가

2012년 11월 시진핑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이후, 중국군 상장(上將) 중 적어도 11명이 조사를 받거나 숙청되었다. 시진핑은 군 내부 파벌 간의 균형과 경쟁을 유도해 특정 파벌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최근에도 다수의 장성이 직무 정지 및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푸젠파와 군공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 집권 기간이 10년이 넘는 상태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반부패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군 내부의 이권 구조가 여전히 공고하고, 단기간 내에 부패 척결이 어려우며, 군에 대한 통제 및 감시체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군부 내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시 주석 최측근 고위직에까지 향한 배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시 주석이 측근을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시 주석 계열 인사를 숙청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장 부주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온라인을 휩쓴 ‘시진핑 실각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4 2024년 8월 제이크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는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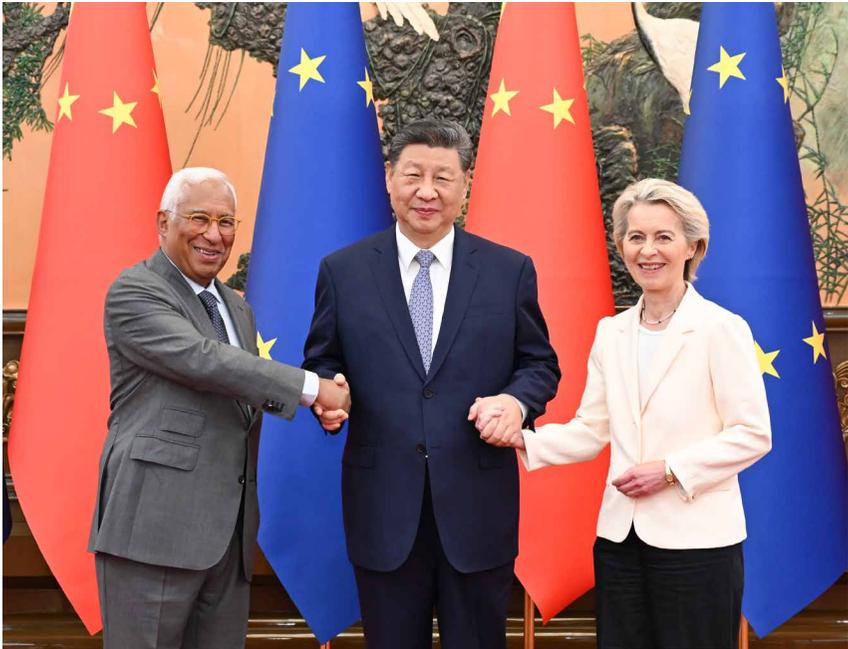
출처: EPA.

다른 가설은 시 주석이 중국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계파도 가차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부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또한 시진핑은 강군 건설을 재임 중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 수년간 계속된 대규모 군부 숙청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원하는 만큼 군 개혁이 따라오지 못하자 인내심을 잃으면서 숙청이 잇따른다고 보는 것이다.⁴¹ 이 경우에도 해석은 갈릴 수 있다. 시 주석이 오히려 군권을 공고하게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계파를 숙청한 이상 결과적으로 권력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41. Jonathan A. Czin and John Culver, “Why Xi Still Doesn’t Have the Military He Wants,” *Foreign Affairs*, August 18, 2025.

그럼에도 시진핑의 중국군에 대한 지배구조와 시진핑의 최근 행보를 보았을 때, 그의 권력이 약화되었거나 실각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잃었다면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동남아시아(4월), 러시아(5월), 중앙아시아(6월)를 연달아 순방하며,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EU 정상회의(7월)와 전승절 80주년 기념식(9월)을 시진핑이 주재한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5 2025년 7월 중국-EU 정상회의



출처: Xinhuanet.

평가

2025년도 상반기 중국은 ‘해협의 천둥-2025A’ 군사훈련, 서해상 인공구조물 설치와 군사훈련, 중러 ‘해상연합-2025’ 훈련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훈련은 각각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기한다.

1. ‘해협의 천둥-2025A’ 군사훈련이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

중국군의 대규모 대만에 대한 포위훈련과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및 주한미군 전략 태세 측면에서 다음 네 가지 구조적 리스크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첫째, 동시전구(同時戰區) 리스크 심화이다. 중국 동부전구(대만)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부전구(한반도)에서의 시차적·동시적 도발 가능성이 함께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연합 대비태세가 두 전구로 분산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는 과거 미중 전략경쟁 심화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 패턴과 유사한 사례가 다수 관측된 바 있다. 즉, 중국과 북한 간 비공식적 전략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동시 위기 관리가 한반도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감시정찰(ISR) 및 지휘통제망 교란 가능성이다. 이번 중국군의 ‘해협의 천둥-2025A’ 훈련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자전(EW) 및 지휘통제(C2) 교란 전술이다. 중국은 대만 전역에서 위성항법체계(GNSS) 교란, 통신망 마비, 군지휘 네트워크 차단을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운용 역량을 시험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술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지휘자산에 대한 광역 교란 시나리오로 확장될 가능성이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괌까지 연결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 지휘망 일부가 대만해협과 공유되는 만큼 한반도 작전통제 체계의 연쇄적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

셋째, 해상교통로(SLOC) 및 공급망 리스크이다. 중국군의 봉쇄훈련은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대한해협을 잇는 동북아 해상교통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빈번히 통제구역 및 경고구역을 설정하면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원유, LNG 등 에너지 수송로와 반도체 부품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항을 포함한 주요 거점의 원자재 공급 불안은 국내 산업생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 및 동맹국과의 공급망 연계 계획 재점검을 필요로 한다.

넷째, 우발적 접촉 확대 가능성이다. 중국군과 연합국 간 군사 및 비군사 충돌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해군과 해경이 병행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 ISR·초계 활동과 중국 해상 세력 간의 근접 우발 접촉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특히 중국은 이미 24해리 접속수역 및 대만해협 중간선을 사실상 무시하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중국해 및 대한해협 인근에서 한-미-일 해군, 주한미군 ISR 자산, 중국 해경 및 민병대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요컨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한반도와 주한미군 전략 환경에 직간접적 복합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동시전구 관리, 지휘통제망 방호, 해상교통로 안정화, 우발충돌 방지라는 네 가지 과제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향후 한미동맹 차원의 ‘다중위기 대응전략(Multi-Contingency Response)’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히 대만문제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구조적으로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2. 중국의 서해상 군사훈련이 한국에 미치는 파장

중국의 서해상 군사훈련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것이다. 푸젠함의 함재기는 기존 항모보다 작전 반경, 체공 시간, 무장 탑재량이 크게 증가했다. 푸젠함이 서해 공역에 진입 시 주한미군 기지,

인천·평택 항만, 수도권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의 조기경보기 KJ-600까지 푸젠함에서 운용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배치 및 출격 패턴까지 탐지 가능하다.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은 서해상 잠정조치수역 무력화 우려를 높인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합의 구역인데, 중국의 일방적 훈련은 합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향후 서해에서 한국의 해상 및 공중 작전 자유도가 축소될 수도 있다.

중국의 서해상 군사훈련은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도전이다. 중국은 한국을 미중 전략경쟁의 전방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서해는 미군의 인-태 전략, 한국의 방어전략, 중국의 해양 전략이 교차하는 핵심 요충지이므로 긴장 관리 실패 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가한다.

한국은 군사·외교·정보 분야에서 3축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한다. 먼저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한미 연합 감시정찰(ISR)을 강화해야 한다. RQ-4 글로벌호크, E-737 피스아이, 미군 RC-135 등 정찰자산을 활용해 서해상 중국군 훈련을 실시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KF-16, KF-21 등 전투기 훈련을 서해권역 중심으로 전환하여 서해 방어력 증강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교적 대응 차원에서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 하면서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군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중국 훈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자 공조 프레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구조물 설치와 항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방적 조치를 반복하며 반응을 떠보는 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선인 동경 124도선을 기준으로 서해 70%를 내해화 하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이는 북방한계선(NLL) 문제, 한미 연합훈련과도 맞물린 안보 사안으로 한국이 유화적으로 대응할 시 중국의 추가 행동 가능성이 크다.

3. 중러 ‘해상연합-2025’이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

중국과 러시아 ‘해상연합-2025’ 군사훈련은 중러가 표방하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연례 협력 일정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양국 해군 간 협력과 전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안보 측면에서 이번 훈련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최신 전력으로 연합 방공과 대잠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동해상에서의 투사력과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연합 전력은 한미 연합 해상 작전에 일정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다중 위협 발생 가능성을 높여 한국군의 대응 자원 분산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중국이 북부전구와 동부전구에서 동시에 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와 협력할 경우 동시전구 압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한국군은 이에 대비한 연합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해상 연합훈련의 주제를 ‘서태평양 안보 위협 공동 대응’으로 설정한 것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견제하고 동해와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해상 감시 능력을 증대시키며, 주변국과의 정보 공유와 외교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동해 안보와 국가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의 연구위원으로, 중국 정치 외교와 동북아 안보 분야의 전문가이다.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센터 연구위원(2015~2020)으로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외대 겸임교수(2015~현재)로도 재직 중이다.

강준영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 중국 정치경제와 대외정책, 경제개혁을 비롯한 동북아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이다. 대만 국립정치대학(National Chengchi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산하 국제지역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베이징대학교와 중국외교대학 등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정환우 박사는 한중무역연구소 대표로 중국의 경제 및 대외경제관계와 한중 무역 및 통상관계의 전문가이다. 한국외대 국제관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중국 난징대학과 상하이사회과학원에서 현지조사(1998) 및 방문연구(2001)를 진행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선임연구위원 및 중국조사담당관을 역임했고 현재 한중무역연구소 대표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률 교수는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중국 정치외교와 동북아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이다.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의 대외전략, 한중관계,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2025 하반기

발행일 2025년 12월

지은이 이동규, 강준영, 정환우, 이동률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5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29-8 95340 (PDF)

A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2025 하반기



ISBN 979-11-5570-329-8